

2015. 12.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방향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성 주 인

연구참여자: 심 재 현

정 도 채

유 은 영

요 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촌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기반 확대와 농촌산업의 발전을 통한 농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농촌융복합산업화(이하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되어옴.
 - 6차산업화 참여 경영체 및 관련 부가가치가 증가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자생력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어서 6차산업화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관련 산업을 고도화하고, 경영체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정부는 6차산업화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오고 있음.
 - 2014년 제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함.
- 본 연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6차산업화 육성 방향과 전략 및 정책과제로 구성되는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 이를 위해 6차산업화 관련 정책 추진 경과 및 농업·농촌 현황에 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본계획의 방향과 비전·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

- 산업화 과정에서 저성장한 농촌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일찍이 농외소득 정책이 추진되었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은 농외소득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과거 정책과는 구분되는 성격을 지님.
 - 농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의 소득기반 확충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농업의 발전 경로를 고려한 농촌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과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꾀하고, 청년, 귀농·귀촌인 등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주체들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목표를 아우르고 있음.

- 농가경제 및 농촌산업 기반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농촌융복합산업은 지속적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음.
 - 농업 다각화 활동에 참여하는 경영체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기준).
 - 농축산물 가공업 참여 농가의 경우 2010년 8,564가구에서 2014년 13,512가구로 57.8% 증가하였으며, 농가식당에 참여하는 농가도 같은 기간 9,043가구에 11,529가구로 27.5% 증가
 - 농업법인 중 농업 외 생산법인 수는 2010년 5,249개(전체 법인수 대비 62.8%)에서 2014년 10,582개(전체 법인 수 중 70.3%)로 101.6% 증가
 - 농업 다각화 활동에 참여하는 경영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증가
 -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기준 농업 외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법인의 부가가치 계산결과 농업법인 중 가공, 유통, 음식·관광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법인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11년 약 1조 2689억 원에서, 2013년 1조 7559억으로 38.4% 증가
 - 6차산업화에 대한 농민의 인식과 참여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6차산업화 정책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97.4%로 나타났으며, 70% 이상이 농촌융복합산업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농촌융복합산업 실태 진단

- 농촌융복합산업의 외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별 경영체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6차산업 분야에 참여하는 농업법인들의 연도별 매출액 증가세가 최근 들어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농가의 경우 구성원의 고령화, 제한된 경영 규모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다양한 농촌융복합산업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공동체의 경우 정부 정책 의존도가 높고, 자생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농식품 시장의 포화 및 소비자 수요의 변화로 다양한 제품 개발과 그에 걸맞은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추진 기반의 개선이 요구됨.
 - 기초통계의 미비로 인해 농촌융복합산업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시·군이나 읍·면, 마을 등 다양한 지역 단위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 따라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과제를 아래와 같이 도출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대상 및 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 농가·경영체 등 농촌 경제 중추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참여 유도 방안 수립

- 농촌융복합산업의 외연 성장과 더불어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성과 목표 제시
- 농촌산업정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전략 수립
- 마을 공동체 등 지원 대상의 유형 등 주체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 지역 단위의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방안 수립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주체들 간 기능 분배 및 협업 체계 구축

4. 농촌융복합산업 개념 및 기본계획 수립 방향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생산활동의 영역 및 정책의 추진 이념을 고려하여 주체, 생산활동, 지역농업 연계, 경영 역량을 기준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의 대상을 설정함.
 - (행위 주체)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혹은 1인 창조기업
 - (생산활동)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합을 통해 차별화되는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 (단순가공 및 포장은 제외)
 - (지역농업 연계)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융복합 관련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활용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경영 역량) 6차산업화 관련 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제품·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영체를 정책 대상으로 선별

- 6차산업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개선 과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 과제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기초통계 정비, 지원체계 확립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관련 체계적인 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추진
 - 농가, 경영체 등 농촌융복합산업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추진
 - 소비자 인식 제고, 지역 단위의 자생적 산업발전 기반 구축, 경영체 성장 단계를 고려한 지원 방안 모색
 - 농촌융복합산업의 다양한 가치사슬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경영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

-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농업·농촌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제시
 - 6차산업화 정책의 추진 경과와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가치사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3대 전략적 목표를 설정
 - * 인증자 매출액 증가율: ('14) 11.2% → ('16) 5.0 → ('20) 5.0
 - * 6차산업 창업자 수: ('14) 396명 → ('16) 1,600 → ('20) 3,000
 - *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14) 549만명 → ('16) 600 → ('20) 800
 -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를 육성, 서비스 개선과 적극적인 방문객 유치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출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추진 과정의 개선 사항과 쟁점들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 조성, 농촌융복합산업화 경영체 육성, 지역 단위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15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 체계의 정비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
 -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 분석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과 기초 실태 조사, 시장분석 및 통계 구축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 수립
 - 도별로 설치된 6차산업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추진
 - 6차산업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제품 BI 개발 및 지역 단위의 소비 확대 전략 수립

- 농촌융복합산업 가치사슬의 확산을 위해 우수 경영체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
 - 농촌융복합산업의 저변 확대와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하여 청년, 귀농·귀촌인 등 새로운 인적자원들의 농촌융복합산업 가치사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창업·보육 지원 강화 및 우수 인력 양성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기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의 내실 있는 운영
 -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해 경영체들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화 판매 플랫폼 구축
 - 농촌융복합산업의 농업 현장 확산을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 및 대국민 홍보

- 지역 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
 -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역 거점 조성을 통한 집적 이익의 확대와 성과 확산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를 지정하고, 공동인프라 조성을 비롯한 특

화 지원 사업 추진

- 생산활동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발굴·적용 추진
 - 농촌융복합산업과 농촌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후방 연계 인프라 조성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한 관련 유사사업의 통폐합
- 농촌관광 수요의 확대와 농촌관광 참여 주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제시
-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 및 민·관 협업을 통한 상품 개발
 - 농촌관광의 자생력 확보, 서비스 품질 제고, 농촌관광의 안정성 제고를 통한 수용태세 개선
 -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농촌관광정보의 통합관리 및 홍보 강화
 -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 개발, 농촌관광상품의 해외 홍보, 홍보단 운영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 례

제1장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5
- 3. 연구의 방법 8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현황

- 1.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책 추진 경과 11
- 2.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 여건 34
- 3. 농촌융복합산업 주요 사례 48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제약요인

- 1. 농촌융복합산업 문제점 59
- 2. 농촌융복합산업 개선 과제 72

제4장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방향

- 1.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대상 81
- 2.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방향 86

제5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 1. 농촌융복합산업 기반 구축 91
- 2. 농촌융복합산업 우수경영체 육성 96
- 3. 지역 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101
- 4. 농촌관광 활성화 104

부록. 6차산업화 인지도 설문조사표	109
참고 문헌	114

표 차례

제2장

표 2- 1.	신활력사업 특징	16
표 2- 2.	농외소득정책의 변화와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성격	33
표 2- 3.	농림업 생산액 변화(2010년도 가격 기준)	34
표 2- 4.	농림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35
표 2- 5.	일자리증감률 및 창업사업체종사자비율	39
표 2- 6.	사업 유형별 농업법인 수	40
표 2- 7.	사업유형별 농업법인 매출액 비중 변화	41
표 2- 8.	농가 다각화 활동 참여 변화	42
표 2- 9.	농촌 지역의 지역개발 경영체 추진 현황	42
표 2-10.	농촌융복합산업의 일반 현황	44
표 2-11.	6차산업화 관련 주체들과 유통업체 유형별 고용창출효과 비교	45
표 2-12.	완주 로컬푸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례	45
표 2-13.	6차산업화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연령별 구성 변화	46

제3장

표 3- 1.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따른 업체 구분	60
표 3- 2.	농가의 농산물 가공 경영 현황	61
표 3- 3.	농가 직거래 경영 현황	62
표 3- 4.	농가의 고용 특성 및 전체 고용자 추정치	64
표 3- 5.	농가의 농업 종사 경력과 6차산업화 활동 참여 현황	64
표 3- 6.	농업법인당 출자금 및 정부 지원금	67
표 3- 7.	식품소비 소비자 인식조사	68

표 3- 8.	선행연구에서 추정된 농촌융복합산업화의 규모 비교	70
표 3- 9.	농촌융복합산업 참여 형태 설문조사 결과	73
표 3-10.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부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75

제5장

표 5- 1.	6차산업 사업자 인증 기준	98
---------	----------------------	----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6차산업화의 개념과 내용 4

제2장

그림 2- 1. 제3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21
 그림 2- 2.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 비전 및 정책방향 23
 그림 2- 3. 미래성장산업화의 목표 및 추진전략 25
 그림 2- 4. GDP 대비 농 생산액 비중 변화 35
 그림 2- 5. 농가소득 구조 변화 36
 그림 2- 6. 농가와 도시가구의 평균소득 분포 37
 그림 2- 7. 농가 총수입의 로렌즈곡선 37
 그림 2- 8. 농가 경영조건 변화 38
 그림 2- 9. 농업법인 현황 39
 그림 2-10. 농업법인 다각화 유형별 매출액 비중 변화 41
 그림 2-11. 농가의 사업 다각화에 따른 판매 소득 차이 46
 그림 2-12. 6차산업 검색 빈도 변화 47

제3장

그림 3- 1. 농촌융복합산업 법인당 평균 매출액 변화 추이 60
 그림 3- 2. 농업관련사업 농가 경영주의 연령 분포 63
 그림 3- 3. 농촌관광 마을 운영 현황 65
 그림 3- 4. ○○ 군 공동체사업 운영 현황 66

그림 3-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부 사업 및 주관부처 77
그림 3- 6. 농촌융복합산업 실태 진단을 통한 정책 과제 79

제4장

그림 4- 1. 농촌융복합산업 정책대상 기준의 선정 83
그림 4- 2.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추진과제 89

제5장

그림 5-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93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도농 간 소득격차와 농촌 내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촌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기반 확충 노력이 절실

○ 농촌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농업 부문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여 농촌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농업·농촌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상위 계층 농가는 성장하는 반면에 영세 고령농이 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위 계층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등 농촌의 소득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소득 기회 창출이 필요

· 2003년에는 상위 20% 농가가 농가 총수입의 52.5%를 차지했는데, 2013년에는 상위 20%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62.1%로 확대(통계청, 농가 경제조사)

- 농촌지역 절대 빈곤층도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기회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시급

- 빈곤율의 경우(2011년 기준)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10.2%로 도시지역의 4.6%보다 높음(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14).
-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 비율도 2005년 10%에서 2011년 23.7%로 급격하게 증가(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14)

○ 농가 소득 구조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농촌 경제활동의 다각화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듯하지만, 농촌은 도시보다 낮은 소득을 보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외소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05년 32.4% → '13년 45.5), 도시근로자와 비교한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 소득: ('10) 66.8% → ('13) 62.5 (농협경제연구소, 2014)

□ 농촌사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농촌사회 전반의 고령화와 생산활동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지역 전반의 활력 저하 및 경제성장기반 위축이 우려됨.

- 농촌의 65세 이상 농가 비중은 2014년 기준 39.1%이며 이는 전국 평균인 12.7%를 상회하는 수치임(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특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농업 생산 경영 주체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농촌지역의 성장 잠재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업 생산경영주체 중 60세 이상 / 49세 이하 비중: ('95) 42.3% / 27.9% → ('10) 60.9 / 14.7 → ('14) 69.2 / 8.2(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최근 귀농·귀촌가구가 농촌 유입 인구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 생산과 관련한 귀농가구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하는 추세를 보임.
- 귀농인구만으로는 농촌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음. 농업 외 새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인구 유입을 피하는 것이 필요

- 귀농가구 추이: ('12년)11,220가구 → ('13년)10,923가구 → ('14년)11,144가구(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14)

□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이 대안으로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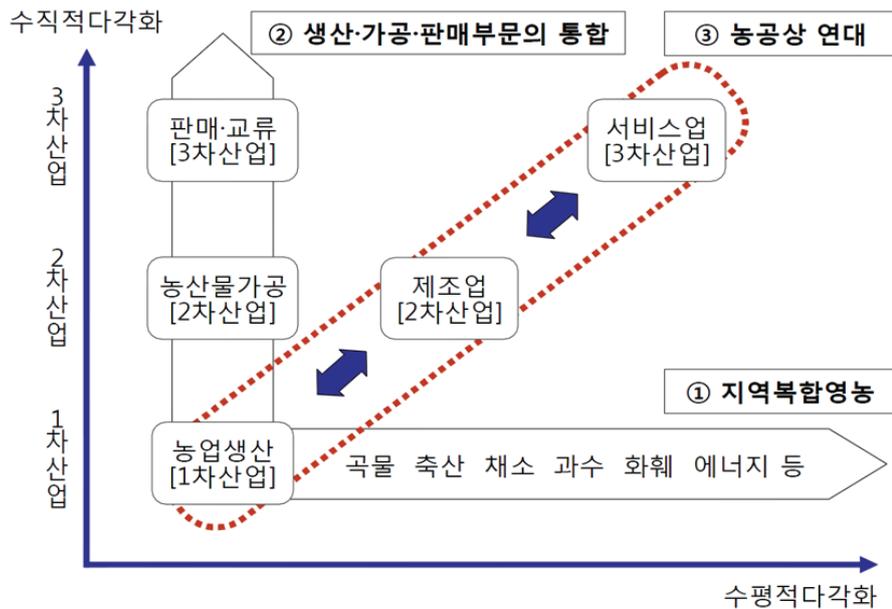
- 지역의 농특산물이나 향토자원을 바탕으로 2차 및 3차 산업활동을 육성하는 6차산업화가 농촌의 소득 창출 대안으로 조명됨.
 - 6차산업화는 “농업·농촌 자원(1차)과 농산물 가공, 외식, 유통, 관광·레저 등 2·3차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함.
 - 6차산업화는 ① 개별 농가 단위의 다각화 활동, ② 지역 내에서 1·2·3차 산업 주체들 간의 연계 활동 등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음.
 - 농업소득 정체에 대응하여 농가의 농외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6차산업화의 의의가 있지만, 일본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6차산업 부문 자체를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참고] 6차산업 부문을 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일본의 정책 사례

- 일본은 약 1조2천억 엔으로 추정되는 6차산업 부문 시장 규모를 2020년에 10조 엔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성장산업화 목표를 설정
- 이를 위해 ① 새로운 수요 확대, ② 생산에서 소비까지 Value chain 구축, ③ 생산현장 강화 등 ‘공격형 농림수산업’ 3대 전략을 수립('13년 2월)하고 13년 만에 농림성 예산을 전년 대비 5.7% 증액

자료: 박준기 외(2014),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1-1. 6차산업화의 개념과 내용



자료: 김태곤 외(2011), 「농업의 6차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6차산업화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취약한 농촌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영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전문성을 갖춘 6차산업화 주체가 많지 않으며, 사업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관련 인력 확보, 자금 및 판로, 기술 및 경영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 향토산업 및 농촌관광 육성 등 6차산업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자생력을 갖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많지 않은 실정인어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6차산업화 육성 방향과 전략을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

- 현 정부의 농정 시책으로 역점을 기울여온 6차산업화 정책의 비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보다 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발굴·제시하여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제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

[참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농의소득 확대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을 담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둬.
- 세부적으로는 연구를 통해 다음 목적을 달성코자 함.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

의 기초 자료를 생산함.

- 정부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갖춘 동시에 차별성이 있는 계획 내용을 제시하여 농촌의 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부처의 정책 및 계획들을 검토함.
- 기본 계획 방향 및 정책 과제 모색을 위해 국내·외 관련 정책 사례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기본계획에 담은 비전, 목표 등을 도출하고 전략 및 핵심 과제를 발굴함.
- 효과적인 계획 추진체계 등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함.

2.2. 주요 연구 내용

□ 기존 정책 진단 및 발전 방향

- 농촌산업 육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정리
 - 농촌산업 육성 및 농외소득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특성 및 의의 정리
- 정부의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내용 검토·분석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지역산업 발전계획,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등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
 - 향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개선 과제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례와 시사점
 - 국내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우수 사례 검토

- 정책적 시사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현황 분석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현황 파악
 - 농업·농촌 여건 개요
 - 농촌융복합산업 현황(농가, 사업체, 마을공동체 등)
-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여건 진단
 - 시·도별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여건
 - 관련 정책 수요자 조사 결과 분석
 -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가능성과 제약점 분석

□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 정책 대상 설정
 -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의 정책대상 정의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설정
 -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 계획을 통해 달성할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의 전략과 과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전략
 - 기본계획의 추진전략과 핵심과제
 - 기본계획에 포함될 과제의 세부 내용
 - *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 관련 기술 개발·보급
- * 전문인력 육성과 교육
- * 제품의 유통, 판로 지원
- * 관련 제도 개선

□ 계획의 추진체계

- 계획의 관리 및 추진 방안
 -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추진체계
 -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지원
 - 계획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3. 연구 방법

□ 문헌, 정책보고서 등 기존 자료조사

- 6차산업화 추진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 자료 검토
 - 농외소득 정책의 추진 경과,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책 및 주요 계획의 관련 내용 검토
- 6차산업화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국내외 문헌 자료 검토

□ 관련 통계 및 행정자료 검토

- 농업·농촌관련 통계자료 검토
 - 통계청의 농어업법인조사, 농가경제조사 등 농촌 경제 일반 및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통계 검토 및 재분석

- 6차산업화 실태 조사 자료의 재분석
 - 농촌진흥청에서 2014년에 실시한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재분석을 실시함.
 - 2014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약 3개월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6차 산업 경영 농가 9,000개, 농업법인 1,000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전체 매출 및 고용 현황, 농업 및 농업 관련 경영 소득, 6차산업화 사업 경영 형태 및 실태, 정책적 지원 희망 사항 등을 조사함.

□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추진에 관한 농촌 주민들의 인식 조사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인지도 및 참여 의향 조사
 -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 조사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례 조사

- 주체·생산 양식에 있어 기존과는 구분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존의 대표적인 사례 외에, 귀농·귀촌, 창농 등 다양한 형태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사례
 - 모바일, SNS 등 새로운 유통·판매 방식이나 생산 양식을 도입하는 사례
 - 각각의 사례들에 대한 성공요인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 자문

10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책 담당자와의 의견 교환 및 인터뷰
- 전문가 회의, 간담회 실시

제 2 장

농촌융복합산업 현황

1.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책 추진 경과

1.1. 농외소득 지원정책 추진

□ 농외소득 정책의 도입 배경

-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경쟁력 약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농촌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찍이 지역의 새로운 농외 소득원 발굴을 위한 정책이 도입됨.
- 정부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생산 활동을 집적시킴으로써 농촌 소득을 증가시키고 노동력의 유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옴.

□ 농외소득 정책의 추진

- 초기 농외소득 정책은 농촌지역 내 새로운 생산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산

업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됨.

① 부업단지조성 사업(1960)

- 농외소득 정책의 시초로, 농촌 실업 및 빈곤에 대응하여 농촌의 유희인력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정책임.
-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농산자재 및 생활필수품의 제작, 유희지 활용한 과수 및 양초재배, 중소가축 사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엄격한 의미의 농외소득에 한정된 정책은 아니었음.

② 새마을공장 설립 지원(1972)

- 농촌지역 내 제조업 시설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 및 지역소득효과 제고를 기대한 정책으로, 1983년까지 총 1,357개의 공장이 읍면 지역에 건설됨.
- 해당 지역에서 원료를 조달할 수 있는 업종이나, 단순한 제조공정 또는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대상으로 함.
- 고용증대, 수출 진흥, 농외소득에 기여하였으나, 개별 분산입지로 인한 입지 상의 불리함으로 침체를 겪음.

[참고]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 농업소득한계론에 대한 대응에서 농촌공업화와 관광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제정
- 핵심정책으로 '농공지구'와 '관광농원'을 신사업으로 제시
- 부업단지, 농산물가공공장, 농어촌휴양지 등 농외소득원 사업체를 지정하고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시책 포함
-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계승

③ 농공단지 조성 사업(1984~)

- 농어촌지역에 중소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농어촌지역에 제조업 유치를 꾀함.

- 1984년 5월 경기, 제주를 제외한 7개도에 1개소씩 시범농공단지 지정
- 개별(분산) 입지에 기초했던 새마을공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적이익을 추구함.
- 농촌경제와 밀접한 연계성이 결여된 채 추진(업종 타게팅 부재, 지역 농업과의 연계 부재), 공단 개발에 따른 생활 인프라(주택 등) 확보 어려움, 농가 농외소득 증진에 대한 영향력 크지 않음.

④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특산단지, 1991)

- 부업단지에서 출발하여, 지역특산품을 개발 및 육성하는 집적지로 성격을 전환하여 추진
- 지역특산품뿐만 아니라, 소기업의 일반공산품 혼재로 사업의 성격 퇴색
- 낮은 기술의 부업형 제품(고급화 부재)으로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원으로서의 기능 한계

- 1980년대 이후, 초기 산업 집적 거점 중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산업(농업)활동과 연계한 농외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함.
 - 농업·농촌자원 기반의 제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농산업화’를 꾀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함.

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1993))

- 농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기반 마련, 농수산물 품질관리를 통해 상품성 제고로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관련 법률 제정
 - i) 산지계열별 가공산업지원: 가공업체 시설, 운영자금 지원
 - ii) 전통식품가공사업: 국내농산물의 수요 개발(국내농산물 원료 사용 시 자금 지원), 전통식품 품목 지정 및 외식산업 지원

②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2005)에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2011)으로 발전

- 일정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 이용을 통해 지역 농업 혁신을 꾀함
 -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생산 위주 농업을 1·2·3차 산업이 연계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농정시스템으로 혁신을 유도
 - 새로운 부가가치 및 고용 증대 효과를 창출
-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
- 초기 관광사업은 단순히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초점을 두고 추진
- ① **관광농원개발(1984)**
- 농장의 시설과 농업 생산과정을 관광 상품화하여 제공
 - 단순 음식물 판매와 숙박 중심으로 운영
 - 전통적 문화, 자연 및 농업 체험 등의 콘텐츠 부족
- ② **휴양단지개발사업(1989)**
- 농어촌관광 소득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 자연경관 등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국민의 여가 수요에 대응
 - 경영능력 부족, 과도한 시설 투자로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 미비
- ③ **농촌민박(1991)**
- 농촌 및 준농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민박을 운영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숙박 외에 농업·농촌과 관련한 자체 콘텐츠 연계는 이루어지지 못함.
 - 유명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에 위치한 마을 외에는 활성화 미약

- 2000년대 이후 농촌관광 정책의 발전
 - 점차 지역의 자원 및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활용하여, 도농교류의 관점에서 도시민 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관광기반 확대를 사업이 추진됨.
- ①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2002)**
 - 관광농원개발 및 농촌민박 사업이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개발사업으로 전환 추진
 - 마을 단위에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문화, 생태 등)에 기반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꾀함.
 -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 방식 도입으로 사업의 내실화 추구
- ② **우수외식업지구(2012)**
 - 지역별로 특색 있고 수준 높은 외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시·도지사 위임)
 - 국산 식재료 소비 촉진, 서비스 개선, 지역 특색을 살린 메뉴 개발 등 교육·컨설팅·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낙후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 **신활력사업(2004) 및 농촌활력증진사업(2008)**
 - 지역 내 대학·기업·연구소·NGO·언론 등과 같은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총 집결하여 낙후 지역 내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낙후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
 - 오지·도서·접경지역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 등과 같은 기존 낙후사업과는 선정 지역 범위, 사업 추진 주체, 사업 내용 등에서 차별화

표 2-1. 신활력사업 특징

구 분	신활력사업	기존의 낙후사업
① 선정지역 범위	시·군·구 단위	지구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 (사업별로 상이)
② 사업추진주체	민간참여 가능(산·학·연)	관 주도(지자체)
③ 사업내용	S/W 분야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원)	H/W 분야 (SOC건설, 생활·정주환경개선)
(예시)	함평 나비축제 함양 옷칠산업 순창 인재학숙	도로개설 및 확·포장 상·하수도 시설 설치 마을회관 건립

자료: 김용렬 외(2012),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외소득 정책 추진 결과 농촌 지역 내 새로운 생산활동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으며, 최근 농촌지역의 자원에 기반한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경쟁우위를 갖춘 지역의 소득원을 발굴하는 데 기여함.
 - 그러나 지역 농가, 특히 중소농 및 영세 고령농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한 형태로 사업들이 추진되어 농가 소득 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임.

1.2.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추진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정책 도입

- 시장개방,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분산된 농업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을 도입
 - 이러한 맥락에서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가공부분이나 판매부분을 도입하는 다각경영인 6차산업화를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김용렬 외, 2014).

- 박근혜 정부는 농가·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함.
 -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

-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지역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두고 농식품 가공, 유통, 농촌관광 등의 분야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함.
 - 우선 개별·분산 추진되었던 농식품가공 분야 지원 사업을 종합적 연계 추진 방식으로 바꾸어 지역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고자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6차산업 융복합지구 등을 추진
 - 또한 개별 경영체 중심의 직거래에서 지역 중심의 직거래로 유통 구조를 변모시키기 위해 ICT를 활용한 온라인 직거래를 확산하고 로컬푸드 등 신유통을 확대
 - 연계·체류형 농촌관광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역 자원과 농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도시민 수요에 맞는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중요한 농정 방향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도입
 - 2014년에 ‘농업·농촌 6차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분야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4.6)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도모함.
 -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법률에서는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11월에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6차산업화 관련 사항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 그 일환으로 단계별 6차산업 육성, 로컬푸드·직거래 등 신유통 확산,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 활성화 등의 방향을 제시

[참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기본계획 주요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촌융복합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6차산업화 과제(2014년)

- ① ‘농업 창업→사업화→판로확보’ 등 6차산업화 단계별 지원 강화
- ② 로컬푸드·직거래 등 新유통 확산(‘17: 전체 농산물 유통의 15%)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4: 3개소 → ‘17: 120), 로컬푸드 레스토랑 활성화
 - 지자체 표준 조례 권고안 제정(‘15)으로 로컬푸드 활성화(‘14: 27곳 → ‘17: 79곳)

- ③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국내관광 중 농촌·음식관광 비중 '12: 4.1% → '17: 8%)
- 농촌체험마을 등급제를 전체 마을로 적용 확대
 ('14: 300 → '17: 전체마을)
 - 농어촌 민박 조식제공 등 규제완화, 예약서비스 제공, 중국관광객 대
 상 홍보 강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업무보고 자료

1.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주요 정부 계획 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2013년 10월 수립됨.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 목표 및 소비 확대 시책 마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정부시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마련 등
- 농업·식품의 개별·분산적 접근에서 생산과 융복합화에 기반한 수평적 다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개별 경영체 분산적 접근에서 지역공동체 중심 종합적 네트워크 활성화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
 -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농업계 네트워크화 촉진, 첨단 수준의 기술과 농업이 융합될 수 있는 농업 분야 융복합(ICT·BT) 지원 플랫폼 활성화를 골자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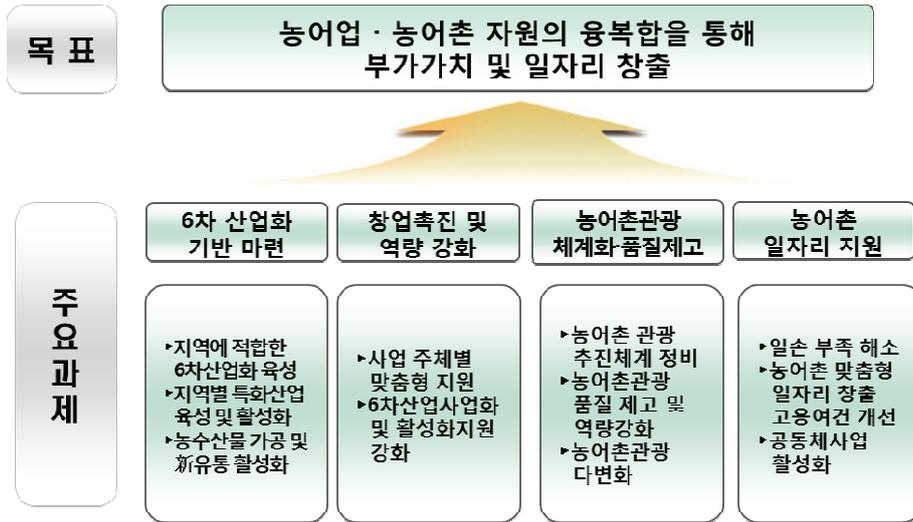
<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목표 >

-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 ◆ 6차산업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 전략
 - ① ICT·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 ②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구축
 - ③ 신규 후계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
 - ④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 ⑤ 식품산업 진흥 및 수출 확대
- ⇒ 농림업 부가가치 26.7→31조원, 농식품 수출액 56→100억불 달성 목표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15~'19)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 주민 소득기회 다각화 관점에서 농어업의 6차산업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함.
 - 동 계획은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 일자리 등 농어촌의 정주여건과 경제활동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며 민관 합동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18개 부·청이 협력하여 수립하는 범부처 협업 계획임.
- 기본계획의 7개 부문 중 하나인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6차산업화 기반 마련, 창업촉진 및 역량 강화, 농어촌관광 체계화 및 품질 제고, 농어촌 일자리 지원 등 4가지 세부추진 목표를 제시
 - 6차산업화 기반 마련은 1)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기반 마련, 2) 6차산업화 시범 수익모델 개발, 3) 농업인 제조·가공활동 규제 완화, 4)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육성, 5)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등 세부시책으로 구성됨.

그림 2-1. 제3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14~'18)

-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HOPE)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 17개 시·도별 생활권과 5대 분야별 시·도 실천과제와 핵심 성과지표를 제시함.
- 5대 분야 중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의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발전 계획
 - 농어업 + (제조업, 서비스업, ICT·BT)를 통한 고부가 가치화와 일자리 창출 (농어업의 6차산업화)
 - 농산어촌의 생산기반 정비, 과수·원예시설 선진화, 친환경 농어업 기반 확충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
 - 귀농·귀촌인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도농 일자리 연계,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①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①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②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③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④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②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⑥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⑦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⑧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 ⑨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⑩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③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⑪ 지방 초·중교 교육환경 개선 ⑫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⑬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⑭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④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⑮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⑯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⑰ 지역 관광산업 육성 ⑱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⑲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⑳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㉑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 인프라 확충	

□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13~'22)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농림업 저성장 구조 속에서 농업과 과학기술의 융합 등 농림식품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2013~2022)”을 확정
- 세부 추진전략으로서 국정과제·농정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한 4대 중점 연구 분야에 5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 중앙부처간·중앙-지방 R&D 기관 간 협업과 상생의 시스템 구축, 민간 R&D 역량 확충 및 기술이전·사업화단계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함.
- 4대 중점 연구 분야 중 국민행복 제고의 일환으로,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를 위해 1차 산업 기반의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하고 6차 산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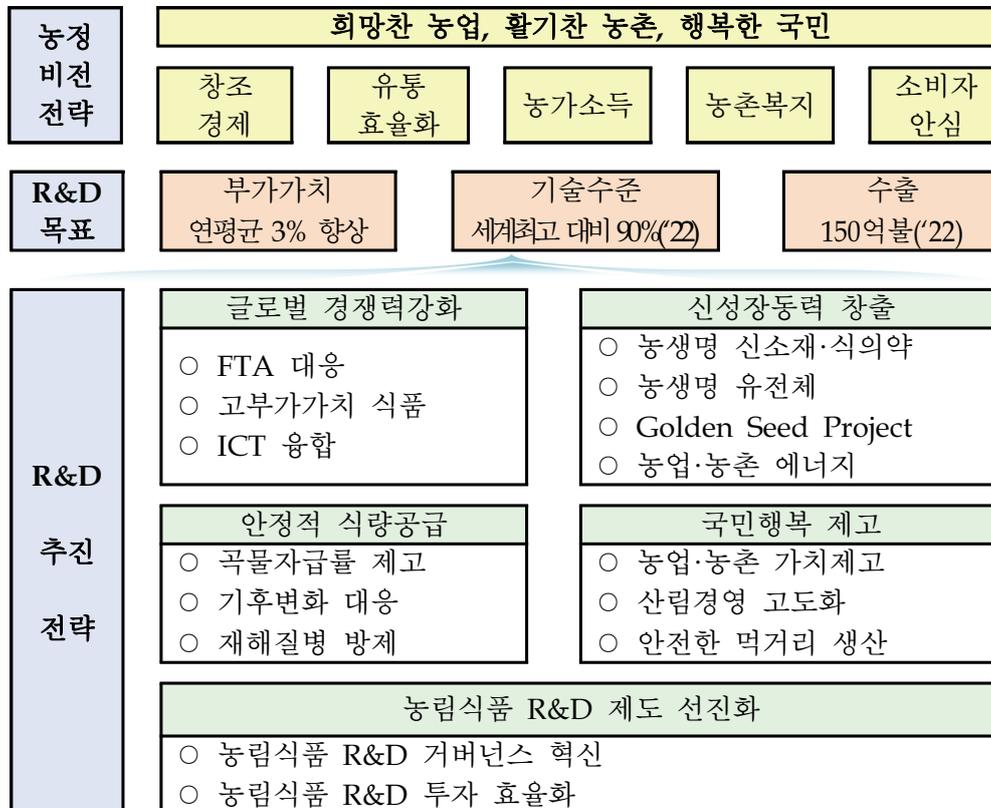
를 통해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이와 관련된 기술로 농촌경관 보존 및 공간계획, 전통지식 문화콘텐츠 개발, 농촌관광 다양화, 옥상텃밭, 귀농인력 농업 정착 지원 기술, 도시 재생 기술 개발 등을 제시

○ 중앙부처간·중앙-지방 R&D 기관 간 협업과 상생의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 R&D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품목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 지원하고자 함.

- 기존에 생산·유통에 머물렀던 지역농업클러스터 및 광역클러스터, 향토 산업육성사업 및 신활력사업의 사업구조를 가공·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연관산업까지 확장, 다변화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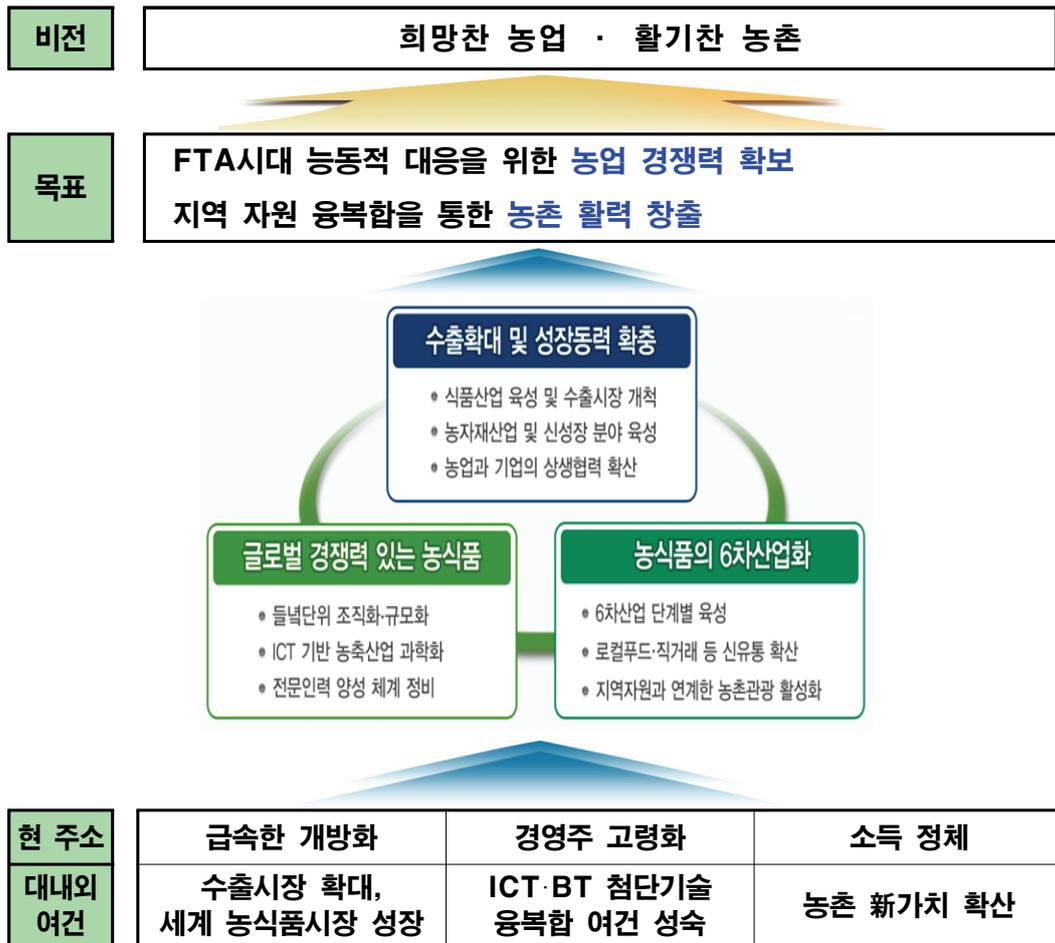
그림 2-2.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 비전 및 정책방향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2014)

- 급속한 개방화에 따라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세계 농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농가의 고령화와 농가소득 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을 꾀함.
- 세부추진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 있는 농식품 체계 구축, 농식품의 6차산업화, 수출확대 및 성장동력 확충을 제시하고 있음.
- 세부추진전략 중 ‘농식품의 6차산업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농업과 2·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을 높이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로컬푸드·직거래 등 新 유통 확산, 농촌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화, 농촌관광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창업 지원,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6차산업화 지구 조성 및 지역특화 클러스터 육성,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개척, 타 부처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귀농·귀촌인을 6차산업화 주체로 육성, 다양한 로컬푸드 소비모델 확산 및 판로 확대, ICT 기반의 직거래 등 新유통의 활성화, 다양한 농촌자원과 승마·산림·음식 등을 연계한 농촌관광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향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2-3. 미래성장산업화의 목표 및 추진전략



1.4.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주요 지원 사업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지역농식품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가용자원(지역 특화품목)을 통합·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활성화와 농어가 소득 증대의 도모를 목적으로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서 주관하며, 사업 신청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해당 지자체의 선발 과정을 거쳐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후, 농식품부가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하는 체계로 운영됨.
-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여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하나의 법인체 형태로 운영되며,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크 분야와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에서의 지원을 받게 됨.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크 지원의 일환으로 농가교육, 벤치마킹, 사업단 운영비, 전담인력비용, 사업단 컨설팅 비용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의 일환으로 브랜드 개발 및 관리, R&D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가공시설 등의 지원을 제공함.
- 시범사업('05~) 20개소, 본사업('08~) 22개소, 광역사업('09~) 12개소가 운영되며, 기본 3년/격년제로 시행 후 평가를 통해 1~2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함.

□ 향토산업육성사업

-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생산을 기반으로 2·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을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07년부터 추진
 - 지원 대상으로는 1·2·3차 산업간 융·복합화가 가능한 시·군 단위 향토자원, 전통적인 농업자원 외 문화·관광·자연자원 등 비농업분야를 포함
 - '07~'15년 총 236사업지구를 선정하고, 218개의 사업이 시행 및 완료됨.

- '16년도 신규 사업에서는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제조·가공·R&D·마케팅·홍보 등에 관한 일괄 지원 체제의 구축, 지역의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한 S/W분야 지원 체계 강화,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과 6차 산업화 지구(농식품부) 등의 관련 사업과 연계 강화, 지역 유관기관 간의 정책연계 강화를 추진 방향으로 함.
 - 추진방향의 이행을 위한 추진 내용으로는,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및 지원배제 분야의 명확한 제시를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농촌의 문화·관광·자연자원 등 다양한 비농업 분야 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농식품부 농촌산업 육성 정책의 외연 확대 추진, 사업의 파급효과 확대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별 평가표 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와 각 시·도가 주관이 되어,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과 기업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을 다각화하고 소득과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을 추진함.

- 시행기관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연구단체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포괄보조금예산의 지출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음.
- 농촌 산업주체 역량 강화 및 혁신 체계 구축, R&D 및 컨설팅 등의 지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기반의 구축 등을 지원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마을권역 단위·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소득 제고를 위한 자원의 다원적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농촌자원복합자원화사업과 마찬가지로 포괄보조금 형태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자율성에 입각한 사업 방식임.
 - 동 사업의 창조적 마을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의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마을단위 소득 개선 사업을 지원함.
 -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 농촌체험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체험마을 지원 인력의 인건비 지원, 교육 등의 세부지원 사업을 추진함.
-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유지기반 확보에 초점을 두고 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수행
 - 주민만족도, 인구유입 목표 달성률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

□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 농촌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관광농원, 농촌민박 등의 농촌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지원
- 농가민박: 농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숙박, 취사, 농산물 판매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

□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지원사업

- 지역에서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주체들의 공동사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됨.
 - 지역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 복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 공동홍보·마케팅, 역량강화, 품질관리,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등의 지원
- 농촌 자원 기반의 다각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법인 등이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격이 있는 컨소시엄 또는 향후 법인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단을 주요 대상으로 함.
 - 중앙정부(농식품부) 주도의 하향식 지원 사업임.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1·2·3차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6차산업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사업자로 지정하여, 6차산업 우수 경영체로 육성 및 6차산업 확산의 주체로 활용하고자 함.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14.6.3일 제정, '15.6.4일 시행)」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됨.
-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유효기간 3년)’를 발급하고,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등을 위한 현장코칭 및 자금지원,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 지원, 언론 및 온라인을 통한 홍보 지원, 사업장 또는 제품 및 홍보물 등에 인증표시 등 제공
- ‘15년 1차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343개 경영체가 지정됨.
 - ‘14년도 6차산업 예비인증사업자(379개소)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 민간 전문가 서면·현장 심사 후 선정
 - 금년도에 인증 신청을 추가로 받아 인증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

1.5. 기존 농외소득정책과 비교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차별성

□ 농가 계층을 고려한 소득기반 확충을 도모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서는 규모화·전문화된 농업 경영체 육성과 병행하여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의 소득기반 확충을 추진함.
 - 1인당 경지면적 등 경영여건이 영세한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에서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생산만으로 어려우며, 농가 단위의 겸업·다각화·전문화를 통해 소득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를 떠받치는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래 인력 유입을 지향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은 귀농·귀촌, 청년 창농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로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적극 유도하는 데서 기존 농외소득 정책과 차별화됨.
 - 산업화 시기 농외소득 정책은 농업의 급격한 쇠퇴로 인한 농촌지역의 경

제적 문제(실업, 소득)를 해결하기 위한 즉자적 대응에 그쳤음.

-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농업 외 새로운 산업(제조업-농공단지)을 통해 지역의 경제기반을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이 이전에도 시도되었으나, 입지 여건의 불리함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제한적 성과만을 거둠.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을 통해 농업·농촌의 선순환 생태계를 견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 변동을 지원
- 농업·농촌 인구 감소 추세가 완화되고 귀농·귀촌 등 새로운 주체들이 농업·농촌현장으로 유입되고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새로운 경제적 시도를 희망하는 다양한 인구집단의 농촌 유입을 통해 새로운 도·농 간 인구 변동을 자극할 수 있는 촉매임.
 - 고령, 영세농, 여성 등 대규모 경작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우며, 이들의 거주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가 생겨나면서 인구 외부 유출을 억제하고, 인구 유입을 통해 농촌 성장 잠재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

□ 지역농업과 연계한 생산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농업의 성장을 도모

- 농업 부문의 미래 성장동력은 해외시장 개척과 더불어 지역 내부 시장 발굴에서 찾을 수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은 농업과 연계한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농촌경제의 자족적 발전을 도모
 - 지역 농산물 연계 가공 및 체험관광, 로컬푸드 활성화로 농업 부문 부가 가치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순환을 꾀함.

- 기존의 정책을 계승하는 가운데, 6차산업화 정책을 통해 지역 내 농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집적지를 구축(6차산업화 지구)
- 지역 내 특정 공간이나 산업집적지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읍·면 등 다양한 농촌 공간 단위별로 적합한 자생적 농촌산업 집적지가 발현되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파급효과 창출

□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지향

-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생산 활동이 타 산업과 적극적으로 연계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구조에서 농업·농촌가치사슬의 영역 확대로 나타나 농업·농촌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꾀함.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을 통해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가치에 대해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은 농촌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꾀함으로써 농촌의 지속적인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농업 부문을 넘어 타 부처 정책과 활발한 연계를 추진

- 다양한 정책 목표와 수단을 가진 농업·농촌 관련 정책들을 6차산업화 정책 아래 연계하여·효율적으로 추진
 - 지원정책의 범위가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있는 만큼 산업 일반 영역에서 농업 부문의 가치사슬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림부 주도로 관련 정책 담당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꾀함.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의 혁신기반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농촌융복합산업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꾀함.

표 2-2. 농외소득정책의 변화와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성격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2010~)
가공 (2차)	내용	지역농업, 자원과 무관한 제조업 유치	농업 기반의 가공산업 육성	지역 혁신역량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농업, 농촌 자원 기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농업·농촌의 비중·영향력 확대)
	주요 사업	부업단지, 새마을공장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지역농업클러스터	복합자원화사업
체험 관광 서비스	내용	단순 농업 외 소득원으로 숙박시설 장려(차별화 X)	도·농교류 관점에서 농촌관광개발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기반한 농촌관광 확대	농촌 다원가치의 상품화로 농업·농촌가치의 전 국민 확산
	주요 사업	관광농원, 농촌휴양단지, 농촌민박		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사업
농촌 산업 거점	내용	농촌 내 농업 외 산업 집적 기반 마련	농업관련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집적지 조성	자생력을 갖춘 농촌산업 클러스터 육성	다양한 공간단위의 산업거점 육성 (마을→지역)
	주요 사업	부업단지, 새마을공장, 농공단지	특산단지	지역농업클러스터 특화농공단지	6차산업화지구
사회경제적 여건		본격적 산업화 농촌유휴인력(실 업) 증가	농작물 수입개방확대 농촌노동력 감소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농촌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국가경제 구조조정	인구고령화 심화 귀농·귀촌등 인구변동의 변화흐름
지역활성화		제조업 부문을 통한 유휴인력 고용 활성화 기대	농공단지 조성 등을 통한 경제파급효과 기대	지역 발전경로 (특화산업등)에 기반한 경제활력 제고	내생적 발전에 입각하여 소득제고-일자리 창출 -인구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창출

2.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 여건

2.1. 농촌 경제 일반 현황

□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 농림업 생산액 정체로 인해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농림어업 실질 GDP 변화(2010년도 가격기준, 십억)를 살펴보면, 2005년 2조2,860억 원에서 2104년 2조 5,770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하지만, 2008년 이후 농림업 생산액은 2조 5천억원에서 정체되고 있음.

표 2-3. 농림업 생산액 변화(2010년도 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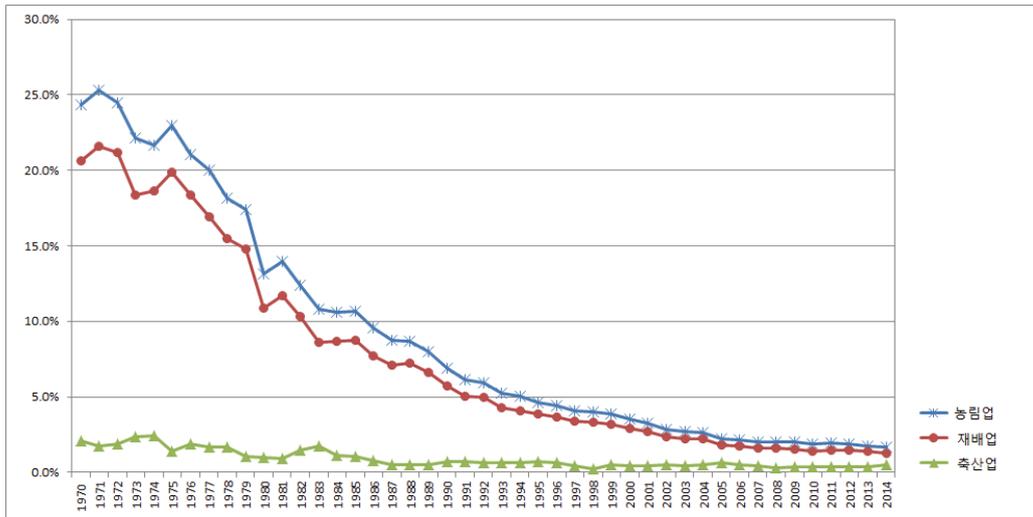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림업	22,860.4	22,944.3	23,609.5	25,061.1	25,911.6	24,871.6	24,351.9	24,200.8	25,271.4	25,770.0
재배업	17,595.5	17,492.4	17,709.4	18,599.7	18,996.8	17,580.2	17,235.4	16,633.8	17,306.1	17,756.3
축산업	3,442.2	3,560.8	3,884.7	4,296.6	4,502.9	4,853.4	4,651.6	5,241.3	5,658.6	5,630.7
임업	1,218.6	1,308.5	1,448.0	1,489.5	1,711.4	1,764.4	1,762.0	1,631.6	1,603.1	1,694.9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 국가 전체 GDP에서 농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 GDP 대비 농림업 생산액 비중은 1970년 24.3%에서 2014년 1.6%로 줄어듦.

그림 2-4. GDP 대비 농림업 생산액 비중 변화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 생산액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2005~2014년) 농림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20.1%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시기 국내 총 부가가치 증가율 61.4%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동 기간 농림업 부가가치의 비중은 2005년 2.9%에서 2014년 2.1%로 감소하였음.

표 2-4. 농림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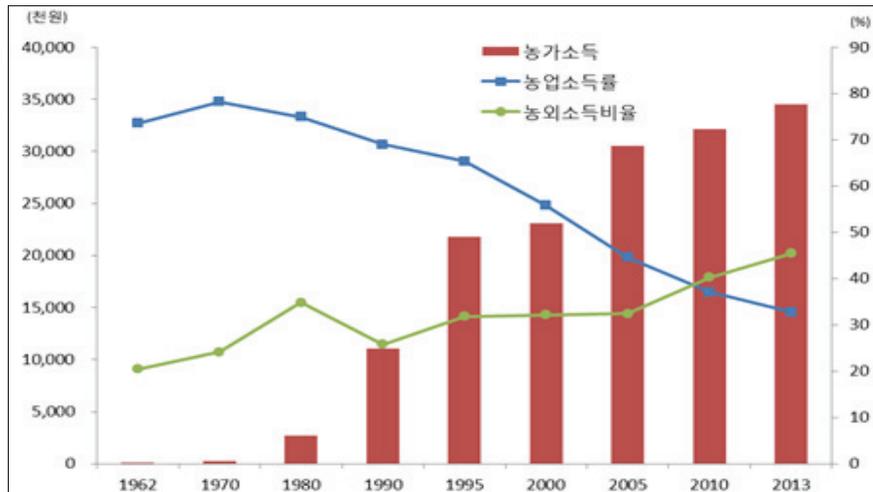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림업 생산액	36,273	36,389	35,837	39,663	42,995	43,523	43,214	46,357	46,648	47,292
농림업 부가가치	23,929	23,843	23,257	22,587	23,540	24,872	26,721	27,359	27,376	28,740
총부가가치 비중(%)	2.9	2.7	2.5	2.3	2.3	2.2	2.2	2.2	2.1	2.1
부가가치 증감률(%)	—	-0.4	-2.5	-2.9	4.2	5.7	7.4	2.4	0.1	5.0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재구성

□ **농가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

- 농가의 소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소득 구조를 보면 농외 소득률은 60년대 25%에서 증가하여, 2013년 기준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소득률은 60년대 75%에서 2013년 30%로 감소하였음.
 - 농외소득의 증가가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2-5. 농가소득 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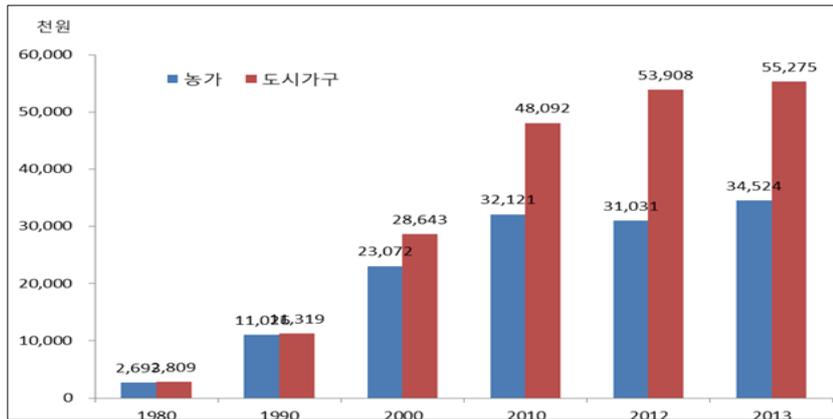
주 1: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총수입 - 경영비) / 농업총수입 *100

주 2: 농외소득비율 = 농외소득 / 농가소득 *100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농가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농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1980년 95.9%에서 2013년 62.5%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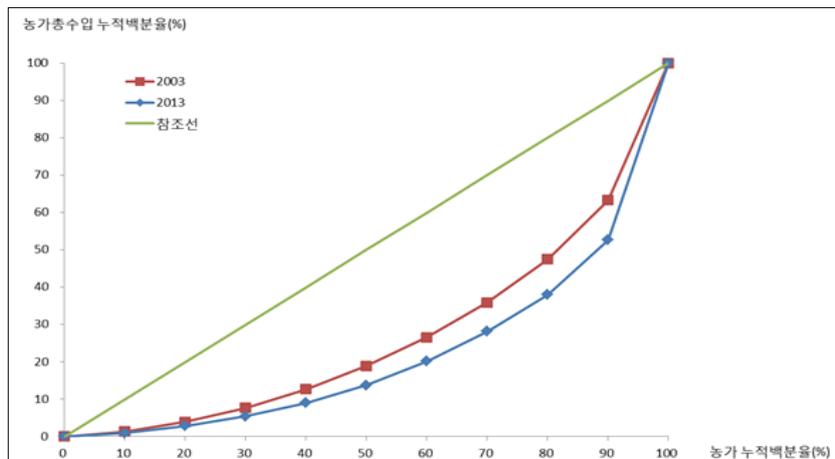
그림 2-6. 농가와 도시가구의 평균소득 분포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농가 사이에서도 상위 소득 농가와 하위 소득 농가 간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03년 농가 수입 상위 20%가 전체 수입의 52.5%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상위 20%가 전체 수입의 6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 간 소득 불균형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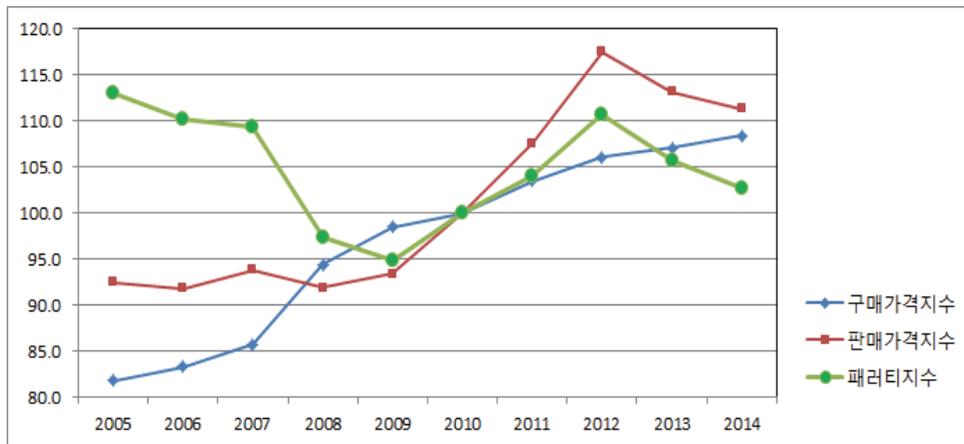
그림 2-7. 농가 총수입의 로렌즈곡선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수급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 확대로 농가소득 불안 요인이 증대하고 있음.
 - 농가의 판매수입 및 구입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급 상황 및 원자재 상황 등에 따른 가격 변동의 심화로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음.
 - 특히 경영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있음.
 -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지수는 2005년 113.1에서 2014년 102.7로 하락
 - * 패리티지수 - 2010년의 판매·구매 평균값을 기준으로 연도별 판매·구매 평균값의 상대적 비교

그림 2-8. 농가 경영조건 변화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농촌의 취약한 산업 기반이 개선되지 못함

- 농촌 지역의 산업별 일자리는 도시지역에 비해 증가율이 낮으며 창업 사업체에서 생성하는 일자리 비율인 일자리 창출 능력도 낮은 실정임.
 - 2005-2011년 간 군지역의 일자리는 1.5% 증가에 머물며 창업 사업체 종사자도 전체 종사자의 5.5%에 불과한 실정

표 2-5. 일자리증감률 및 창업사업체종사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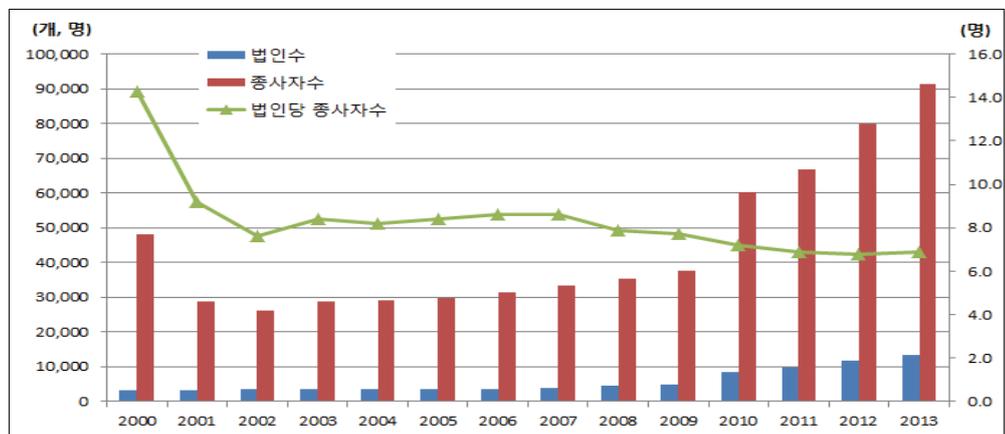
	2005-2011년 일자리증감률(%)	창업사업체종사자비율(%)
전체	9.0	6.8
일반시	18.5	9.3
도농복합시	16.9	7.8
군	1.5	5.5

자료: 심재현 외(2014), 「지역 일자리 지수 개발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의 주요 경영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살펴보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질적으로는 성과가 미흡한 실정임.

- 농업 법인은 2000년 3,366개에서 2013년 13,333개로 1만 개가 증가하였으며 종사자도 47,996명에서 91,469로 증가함. 하지만 법인당 종사자 수를 보면 2000년 14.3명에서 2013년에는 6.9명으로 감소함.

그림 2-9. 농업법인 현황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어업법인조사

2.2.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에 해당하는 농가 및 경영체의 다각화 활동 증가

- 정부의 지속적인 농외소득 확대 정책의 추진과 농가 및 농업 경영체의 자구 노력 등에 의해 농촌 경제활동 주체들의 다각화 참여는 점차 증가 추세를 보임.
 - 농촌지역에서 2·3차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농업법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농업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 농업법인 중 농업 외 생산법인 수는 2010년 5,249개(전체 법인수 대비 62.8%)에서 2014년 10,582개(전체 법인 수 대비 70.3%)로 101.6% 증가
 - 가공판매 및 유통판매 부문의 법인의 증가세가 높음.

표 2-6. 사업 유형별 농업법인 수

(단위 : 개, %, %p)

구분	2010(A)		2014(B)		증감		증감률(D-C)
	법인수	구성비(C)	법인수	구성비(D)	증감수(B-A)	구성비	
법인 수	8,361	100.0	15,043	100.0	6,682	100.0	0.0
농업 생산	3,112	37.2	4,461	29.7	1,349	20.2	-7.6
농업생산 이외	5,249	62.8	10,582	70.3	5,333	79.8	7.6
가공 판매	1,568	18.8	3,154	21.0	1,586	23.7	2.2
유통 판매	1,730	20.7	4,100	27.3	2,370	35.5	6.6
농업서비스	613	7.3	942	6.3	329	4.9	-1.1
기 타	1,338	16.0	2,386	15.9	1,048	15.7	-0.1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어업법인조사

- 매출액 기준으로는 유통 및 가공 판매 등 농업 외 생산부문의 매출이 농업 부문의 매출을 초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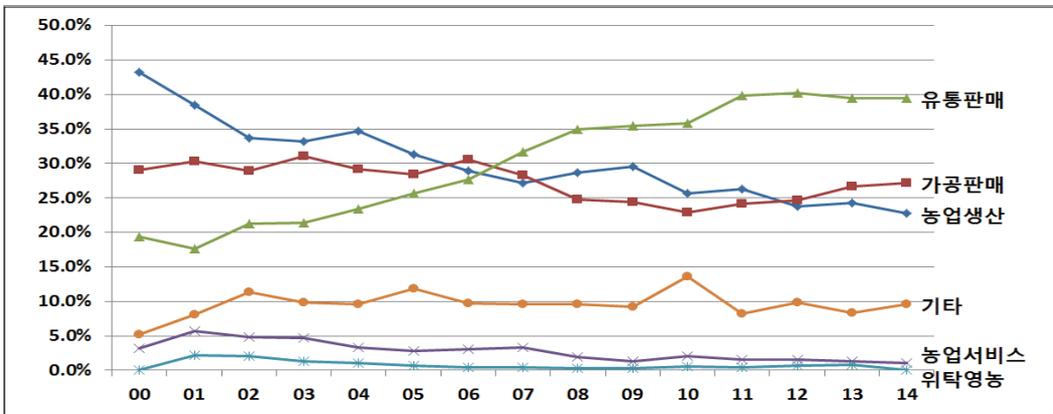
표 2-7. 사업유형별 농업법인 매출액 비중 변화

(단위: 백만 원, %, %p)

구분	2010(A)		2014(B)		증감		증감률 (D-C)
	매출액	구성비 (C)	매출액	구성비 (D)	증감 (B-A)	구성비	
법인수	12,872,088	100.0	23,023,039	100.0	10,150,951	100.0	0.0
농업생산	3,294,850	25.6	5,227,656	22.7	1,932,806	19.0	-2.9
농업생산 이외	9,577,238	74.4	17,795,383	77.3	8,218,145	81.0	2.9
가공판매	2,946,106	22.9	6,241,583	27.1	3,295,477	32.5	4.2
유통판매	4,609,780	35.8	9,092,446	39.5	4,482,666	44.2	3.7
농업서비스	263,183	2.0	243,916	1.1	-19,267	-0.2	-1.0
기타	1,758,169	13.7	2,217,438	9.6	459,269	4.5	-4.0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어업법인조사

그림 2-10. 농업법인 다각화 유형별 매출액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어업법인조사

- 농촌융복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가 다각화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농가 다각화 활동 중 농촌융복합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직판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참여 농가 증가
 - 농축산물 가공업 참여 농가의 경우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57.8%가 증가 하였으며, 농가 식당에 참여하는 농가도 같은 기간 27.5% 증가

표 2-8. 농가 다각화 활동 참여 변화

(단위 : 개, %, %p)

구분		2010		2014		증감율(%)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2차산업	농축산물가공업	8,564	0.7%	13,512	1.2%	57.8%
3차산업	직판장	28,127	2.4%	7,731	0.7%	-72.5%
	직거래	89,107	7.6%	97,232	8.7%	9.1%
	농가식당	9,043	0.8%	11,529	1.0%	27.5%
	농촌관광사업	4,468	0.4%	4,489	0.4%	0.5%
	소계	134,841	11.1%	130,004	10.8%	-7.5%
소계		139,309	11.8%	134,493	12.0%	-3.5%
총 농가수		1,177,318		1,120,776		-4.8%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 농촌 지역에서는 각종 정부 사업을 통해 농업의 다각화 활동을 매개로 농촌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개발 경영체도 다수 등장하고 있음.

표 2-9. 농촌 지역의 지역개발 경영체 추진 현황

사업명	추진주체	추진연도	추진실적(개소)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010	720
농촌관광체험마을	농림축산식품부	2007	805
농가맛집	농촌진흥청	2007	74
농촌교육농장	농촌진흥청	2006	351
향토산업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007	18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005	75
신활력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005	140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농촌진흥청	2002	167
산촌생태마을사업	산림청	1995	240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어업법인조사

- 직거래, 사이버거래, 로컬푸드 등 농업 생산과 연계한 새로운 유통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인프라의 대폭적 확충
 - 로컬푸드 직매장(개소수/매출액): ('12) 3개/62억 원 → ('13) 32/317 → ('14) 71/950 → ('15.9) 98/1,220
 - 新유통 비중: ('12) 8.4% → ('13) 10.9 → ('14) 14.4
 - 포스몰(POS-Mall), 직거래 플랫폼 '이웃농촌' 등 ICT 기반 新유통 모델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임.
 - 사이버거래소 매출액: ('12) 11,146억 원 → ('13) 16,073 → ('14) 22,131 (수산·가공품 포함)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부가가치 창출 확대

- 농림업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공, 유통, 음식·관광 서비스업 등 6차산업화 관련 주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농어업법인 중 가공, 유통, 음식·관광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법인들에 대하여 한국은행 가산법¹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의 총합을 측정함.
 - 농촌융복합산업 부문의 추정 부가가치는 2011년 약 1조 2689억 원에서 2013년 약 1조 7559억 원으로 증가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농촌융복합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38.4%로 같은 기간 농림업 부가가치 증가율 2.5%를 상회

¹ 부가가치 = 경상이익+ 인건비+ 임차료+ 조세·공과금+ 순금융비용+ 감가상각비

표 2-10. 농촌융복합산업의 일반 현황

		2011	2012	2013	증가율(11→13)
6차산업 법인 수		4,497	5,678	6,938	54.3%
6차산업 부가가치(십억 원)		1,268.9	1,521.6	1,755.9	38.4%
농림업 부가가치(십억 원)		26,721	27,359	27,376	2.5%
가공	법인 수	2,046	2,472	3,022	47.7%
	수입(십억 원)	3,474.5	4,217.0	5,313.0	52.9%
유통	법인 수	2,525	3,243	3,896	54.3%
	수입(십억 원)	5,733.8	6,878.2	7,888.8	37.6%
음식· 관광	법인 수	340	506	644	89.4%
	수입(십억 원)	86.4	138.2	163.4	89.2%

주: 가공, 유통, 음식, 관광을 중복으로 참여하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 법인수의 총합과 전체 법인수가 불일치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어업법인조사

□ 고용 창출 등 농촌융복합산업에 의한 농촌 지역경제 파급효과 증가

-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은 일자리와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농촌경제의 활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 동일한 생산활동에 비해 농업·농촌 관련 주체들에 의한 6차산업화 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농업법인들에 의한 유통 활동의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유통 주체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법인조사 상의 유통부문 농업법인의 고용 창출 효과는 부가가치 10억 원 당 21.0명이며, 이는 도소매업 평균 12.2명 및 기타 유통업체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상회하는 수치임.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업과 연계한 새로운 유통활동이 확산되어 농가의 참여가 증가하고 관련 매출 및 일자리가 확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표 2-11. 6차산업화 관련 주체들과 유통업체 유형별 고용창출효과 비교

(단위: 인)

	6차산업 (유통)	백화점	대형 마트	슈퍼 마켓	그 외 기타 종합소매업	도소매업 평균
부가가치* 10억 원 당 고용	21.0	1.9	6.0	16.2	15.2	12.2
매출 10억 원 당 고용	2.6	0.9	1.9	3.3	5.8	3.2

주: 유통업의 부가가치는 매출총이익과 동일하므로 매출총이익으로 부가가치 계산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어업법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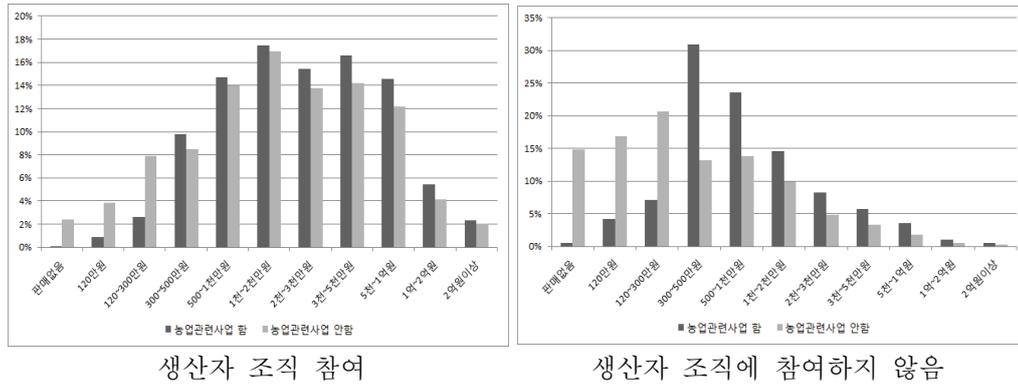
표 2-12. 완주 로컬푸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례

	2013	2014	2015(10월)
매출액(10억 원)	22,028	33,834	35,377
참여농가	1,876	2,640	3,152
매출 10억 원 당 참여 농가	85.2	78.0	74.2
부가가치 10억 원 당 참여농가*	677.7	620.9	590.8

주: 부가가치는 농업법인의 평균 부가가치율(매출총이익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2015년
 은 12월까지 매출 추정치 적용
 자료: 완주군 내부 자료

- 가공 부문의 경우에도 동일 규모 생산 시 고용 창출 효과가 산업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상의 가공 부문 농업법인의 고용 창출 효과는 매출 10억 원 당 4.36명임. 이는 제조업 부문 평균 고용 창출 효과 2.5명과 식품제조업 부문 평균 2.3명을 상회함.
- 농가가 조직화되고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할 때 홀로 농업 생산만을 수행할 경우보다 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생산자 조직의 참여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사업 다각화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11. 농가의 사업 다각화에 따른 판매 소득 차이



주 1: 농업관련사업 농축산물직판장, 농축산물직거래, 식당경영, 농축산물가공업, 농기계
 작업대행, 농촌관광사업(주말농장, 민박경영 등)임.
 주 2: 생산자 조직은 작목반, 농업법인체 등을 의미
 자료: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농촌 내 새로운 인구집단의 참여 증가

- 청장년층의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 2013에 비해 참여 교육생의 평균연령은 낮아지는 추세임.
 - 특히 3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교육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표 2-13. 6차산업화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연령별 구성 변화

연령	2013		2014		2015	
	교육생수	비중	교육생수	비중	교육생수	비중
10대	0	0	0	0	85	8.1%
20대	0	0	27	4.8%	37	3.5%
30대	5	5.7%	49	8.7%	74	7.0%
40대	28	32.2%	147	26.2%	259	24.5%
50대	30	34.5%	230	40.9%	382	36.2%
60대	19	21.9%	98	17.4%	195	18.5%
70대	4	4.6%	11	2.0%	21	2.0%
80대	1	1.1%	0	0	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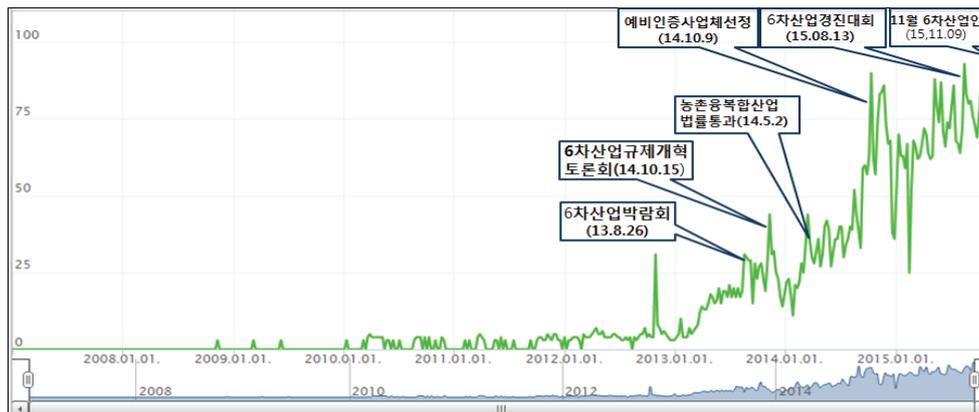
계	87	100%	562	100%	1,055	100%
평균연령	53.1세		51.2세		49.0세	
30대 이하 비중	5.7%		13.5%		18.6%	

자료: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농민 및 일반 대중의 인식 확대

- 농민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6차산업화 정책 인지 여부² 조사 결과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6차산업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의 6차산업화’의 개념을 알고 있다: 97.4%
 - 검색사이트 ‘6차산업’의 검색 빈도 분석 결과 지속적으로 검색 빈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검색 최고 빈도 일수: 100 (2015. 11. 9, 11월의 6차산업인)
 - 2015년 8월 17일: 93 (2015. 8. 13, 6차산업 경진대회 관련)

그림 2-12. 6차산업 검색 빈도 변화



자료: 네이버(각 연도), 네이버 트렌드 분석 - '6차 산업'

² KREI 리포터 대상 6차산업화 인식 설문조사 실시 결과(총 응답자 394명)

3. 농촌융복합산업 주요 사례

3.1. 개요

□ 다양한 형태의 농촌융복합산업 사례 증가

- 기존 농가들의 경영 다각화와 더불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새로운 생산·유통 방식을 도입한 농촌융복합산업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귀농·귀촌, 청년 창농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체들이 농촌융복합산업 생산활동에 참여
 - 전통적인 가공제품 및 서비스 외 새로운 형태의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
 - 모바일 앱 기반 플랫폼,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하여 판로 개척의 대안을 제시

□ 성공 사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도출

- 새로운 집단,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각 사례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3.2. 주요 사례

3.2.1. 충북 괴산 클래식 농원



○ 개요

- 창업 연도: 2014년 7월
- 매출액: 3억
- 경영체 종사자 수: 4명

20대 귀농인의 과일 농원 창업

- 클래식 농원의 김선규 대표는 대학 시절,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본격적으로 농사일에 관심을 갖게 됨.

- 클래식 농원의 전신인 ‘큰손 농원’에서 사과, 감자, 매실을 수확해 판매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블로그 공동구매를 통해 과일을 팔기 시작함.
- 사람들이 브랜드 커피를 마시는 것과 달리 과일은 어떤 브랜드의 과일을 먹겠다는 인식이 없다는 것, 농산물 브랜딩에 관해 배우고자 파머스 파티라는 디자인 농산물 브랜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함.
- 그 후, 2014년 7월 아버지의 큰손 농원을 업그레이드 한 ‘클래식 농원’을 정식 오픈함.

○ 6차산업화 활동상의 특징

- 과일의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함.
 - 젊은 소비자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브랜드 가치,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농산물 가공식품을 세련되게 제작하고 있음.
 - 가공식품에 ‘클래식 사과즙’, ‘클래식 매실키트’, ‘클래식 간식세트’ 등과 같이 ‘클래식’이라는 본인의 브랜드를 붙여 정체성을 부여
 - 또한 가공식품 외에도 클래식 브랜드 로고로 디자인한 에코백, 장식품 등을 농장 안에서 판매하거나,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함으로써 단일 브

랜드로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판매

-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15농촌마을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수디자인 사례로 선정됨.
- 다양한 유통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향상
 - 공식 블로그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작함.
 - 모바일 매신저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메뉴에 입점함. 일반적인 쇼핑몰과 달리 선물을 위한 구매 비중이 70% 이상인 유통매체로, 홍보 및 마케팅에 효과가 큼. 클래식사과즙, 매실청키트 등 총 5가지 상품을 입점함.
 - 디자인 잡화 전문 쇼핑몰인 10X10에 입점함. 젊은 층이 세련된 디자인 소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10X10에 입점함으로써,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향상됨.

3.2.2. 충남 공주 영농조합법인 ‘자연사랑’



○ 개요

- 창업 연도: 2010년
- 연소득: 1억
- 귀농인과 현지인이 함께 마을 공동체를 결성한 영농조합법인
- 금융업계 종사자였던 금승원 대표가 2009년 공주로 귀농하면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 2011년 베리류를 생산하는 11명의 농가를 조직화하여 공동법인을 설립했으며, 수익금을

참여 농가에 분배하는 체계를 갖추.

- 지난해 ‘베리베리코리아’를 설립, 기 조합원 11명과 올해 50명의 신규 참여 농가를 받아 들여 총 61명의 조합원으로 확대함.

- 자연사랑법인은 재배, 가공품개발, 체험교육운영, 판매 및 마케팅 등의 각 분야를 조합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6차산업화 활동상의 특징

-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8,000여 회원과 재배기술 등 정보 공유
 - 귀농 초기 블루베리 재배기술이 부족했던 금승원 대표는, 네이버 카페 ‘즐거운 블루베리 학교’를 개설하여, 블루베리 재배기술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듦.
 - 금 대표는 영어로 쓰여져 있는 블루베리 재배 관련서적을 번역해 카페에 올리고, 매년 한차례씩 공주에서 세미나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그 결과 현재 블루베리 농가 등 8,0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미나에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음.
- 유통판로 확대 및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 금 대표는 수확한 블루베리 가운데 생과로 팔 수 있을 정도의 상품성을 갖춘 것은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나머지 물량은 가공을 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함.
 -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금 대표는 블루베리 가공제품을 50가지를 만들 수 있으며, 그중 상품화한 것은 식초·잼·양갱 등 5종류임.
 - 블루베리 잼, 밤잼, 베리베리발효액 등을 가공하는데 잼을 가공할 때는 합성감미료, 보존료, 착향료가 없는 조미료 3無와 당의 체내 흡수를 줄여주는 자일로스 설탕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 건강을 생각하고 있음.
 - 생산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전량 직판으로 판매함.
 - 도농교류 사업으로 Eco Marche를 운영하고 있음. Eco Marche는 소비자 직거래 비율을 높이고 공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직거래 농민장터임.

- 향토자원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 지역의 훌륭한 자원이지만, 활용이 되지 못하던 용문서원을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함.
 - * 용문서원은 조선 현종 때 학자이자 정조 임금의 스승이었던 이유태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곳으로, 수백 명의 문인이 육성된 향토자원임.
 - 용문서원 경제교실, 선비문화 체험교실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총 5가지 주제로 나뉜 체험교실은 인성교육과 함께 로컬푸드 및 발효음식 등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에 대해 가르침.
 - 한해 3000명 정도의 초·중·고등학생이 체험에 참여함.

3.2.3. 전남 고흥 빈스힐



○ 개요

- 창업 연도: 2015년 6월
- 종업원 수: 3명 (가족농)
- 커피전문가의 귀농
- 목사 출신의 커피 전문가인 길철웅 대표가 전남 고흥에 귀농하여 커피농장을 시작함.
- 외국에서 커피 재배와 로스팅 등 전문과정을 밟았으며, 커피 재배에 대해 8년간 공부함.
- 커피 농사를 겸할 수 있는 곳으로, 고흥이 최적지라고 판단함. 고흥지역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하며, 일조량이 많아 커피농사에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함.
- 시설하우스를 통한 커피재배 농장을 운영함.
 - 빈스힐 커피농장의 시설하우스 2동에 200그루의 6년산 커피나무와 커피모종을 키우고 있음. 아라비카종에서도 쿠바의 크리스탈 마운틴 품



종이 대부분임.

- 우기와 건기 구분이 확실한 해외의 커피 재배와 달리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커피나무들은 사계절 계속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커피 체험을 하기에 적합함.
- 커피농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원예체험

장 및 커피체험장으로 제공하고 있음.

○ 6차산업화 활동상의 특징

- 커피농장과 카페시설을 연계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함.
- 도시민들의 재충전을 위한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함.
- 성인들에게는 커피와 함께할 수 있는 힐링센터를 제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원예체험장을 제공하고자 함.
- 커피를 매개체로 문화네트워크를 만들어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목하는 콘텐츠사업을 진행함. 11월에는 ‘커피에 힐링을 담다’를 주제로 작은 문화행사를 개최함. 또한 대한커피협회, 고구려대학 커피학과 등의 도움을 받아, 커피 관련 전시와 함께 고흥에서 생산된 해조류를 소개하는 힐링콘서트 개최 등을 기획함.

3.2.4. 충남 논산 ‘궁골식품’



○ 개요

- 창업 연도: 2009년
- 종업원 수: 10명 (사무직 1명과 마케팅 1명을 제외한 생산직 8명 모두 고령의 마을 노인)
- 매출액: ('13)277백만 원→('14)415백만 원 / 49%증가

- 체험객: ('13)1.5천명→('14)3.0천명 / 200% 증가
 - 귀촌한 부부가 지역 노인을 위해 콩 사업을 시작함.
 - 최명선 대표가 남편의 퇴직과 함께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충남 논산에 귀농한 후, 마을의 주력 생산품인 콩을 노인들 대신 팔아주는 등 적극적으로 마을 일을 거들기 시작함.
 - 콩을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여, 콩을 메주로 가공해 팔자 매출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의 가닥을 잡음.
 - 2009년 8월 마을주민들과 함께 '궁골식품 영농조합법인' 설립함.
- 6차산업화 활동상의 특징
-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령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종업원 10명 중 사무직과 마케팅 각각 1명을 제외한 생산직 8명이 모두 고령의 마을 노인임.
 - 지역 내 관련 기관, 산업체, 지역 주민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기적인 소통의 장을 개척함.
 - 1차로 작목연구회, 생산작목반, 실버노인, 귀촌인과 협력해 딸기, 고구마, 대두, 시래기, 고추 등의 원료를 공급받음.
 - 2차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미곡종합처리장, 농협 등을 통해 2차 가공품(무시래기, 딸기고추장, 고구마줄기, 시래기비빔밥 등)을 생산 판매함.
 - 이 과정에서 지역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산물을 수매 건조하고, 이를 전통장류로 가공하여 기업체 및 온라인쇼핑몰, 천안 갤러리아백화점, 대전농협유통에 입점 돼 판매하고 있음.
 -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공간을 제공
 - 농산물 수집과 판매, 가공을 하고 다문화 가정 지원프로그램, 아동식생활프로그램, 전통요리강좌(전통장, 김장, 계절요리) 등의 체험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양질의 전통식품을 보급하는 등 지역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 딸기체험, 고구마체험, 연산5일장과 연계해 도시민들이 단순 체험이 아닌 지역과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임.
- 중장기적으로 농촌과 공골식품이 보유하고 있는 농촌 환경을 이용해 옹기테마파크, 장 담그는 날을 운영하고 체험관광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마을로 만들어 갈 계획

3.2.5. 와우목장 밀크스쿨



○개요

- 밀크스쿨 개시일: 2012년
- 매출액: 1억 5,000만원
- 연매출 1억 원까지의 도달 경과시간: 2년
- 경영체 종사자 수: 목장 전체 운영 5명, 체험외부강사 12명
- 위철연 대표가 1972년부터 일군 목장을 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한 아들인 위준민씨(39세)가 아버지와 함께 운영
- 낙농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소득 창출 기회 확대
- 낙농가가 원유 생산만으로는 소득 창출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위준민씨가 낙농 1세대인 부친의 목장 경영 방침에 더해 6차산업으로의 진입에 노력함.
- 원유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우유 회사들에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낙농체험 프로그램에 투자하기 시작함.

○ 6차산업화 활동상의 특징

- 체계적인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둠
 - 10만 평의 대지에 280두의 소를 키우며 우유를 생산하는 것 외에 다양한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친다는 철학을 가짐.
 - 와우목장의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풀을 먹은 소가 만든 우유가 아이스크림과 치즈가 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직접 겪을 수 있음.
 - 직접 소에게 건초를 먹이고 우유를 짜보고 낙농제품을 만듦.
-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놀이공간을 제공
 - 목장의 선입견을 없애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아기자기한 조형물과 꽃과 나무, 거대한 목장을 관통하는 젓소차를 설치
 - 체험 활동장을 겸하는 카페에서 고품질의 요리 서비스를 제공
-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고민을 통해 재방문율을 획기적으로 올려 연간 방문객 목표를 3만 명으로 잡음.
- 주변 농가와 협동조합 결성을 통한 지역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 울면, 감곡, 이천 등지의 8개의 농가와 함께 협동조합을 만듦.
 - 각 농가가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객들이 저렴한 값에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목장 체험 외에 협동조합에 포함된 다른 농촌 체험도 가능함.
 - 고객들에게도 조합 가입 자격을 주고 수익의 일부는 협동조합의 재산이 돼 프로그램 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음.

3.2.6. 하동 휴림황칠(주)

황칠맥(脈) 인터뷰자료



○ 개요

- 창업 연도: 2013년
- 종업원 수: 3명
- 매출액: 1억 원
- 황칠나무 재배를 시작으로 자연치료액을 연구하면서 벤처사업 시작함.

- 조경수를 재배하는 나무농사꾼으로써 약용이 되는 나무인 황칠나무를 소개받아 재배하기 시작함.
- 5년 연구 끝에 황칠나무의 재배조건과 특성을 체득했고, 황칠나무로부터 통풍에 대한 자연치료액을 연구·개발해 발명특허를 냄.
-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방에만 자생하는 황칠나무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남 하동에 처음으로 재배단지를 안착시킴.

○ 6차산업화 활동상의 특징

- 하동군과 특허청 진주지식센터의 도움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연구와 자체 예비임상연구로 성장 기반을 닦음.
- 지금까지 ‘황칠 발효 대사체 제조 특허’ 등 특허등록 3건, 특허출원 5건 및 여러 건의 디자인과 상표등록을 마침.
- 추출물 무독성 결과보고서, 무농약 시험성적서를 받음.
- 2015년,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공중과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 황칠에서 1차(묘목 재배), 2차(제조·가공), 3차(치료·힐링체험) 산업을 아울러 6차산업으로 발전할 계획임.
- 황칠을 테마로 ‘큐어&힐링타운’을 만들어 내·외국인이 치료와 힐링·휴양을 위해 하동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3.3. 농촌융복합산업 사례 특징

□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

- 귀농·귀촌, 청년 창농 등 농촌에 새롭게 유입된 주체들의 참여 확대
 - 경영적 마인드를 가진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기존의 1차 산업에서 한 단계 나아간 새로운 시도들과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전략을 시도함에 따라, 정체되어 있던 지역 경제 잠재력이 향상됨.
 - 다양한 배경을 가진 경영체들이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경제의 활력 제고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경영 다각화가 어려운 취약농가 및 계층의 6차산업화 참여 활성화를 꾀함.
 - 고령농, 중소농, 여성 등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도 증가

- 전통적인 식품가공, 체험관광의 프로그램에서 진화하여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판매·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시장경쟁력 확보
 - 가공식품과 관광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인 도시민 수요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공급을 통해 경쟁력 확보
- SNS, 모바일메신저,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최신 유통 경로에 대응한 판매 전략 수립으로 소비자들의 접근성 제고
 - 친환경, 건강증진, 안전식품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치 홍보와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 증가
- 연구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및 경영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제 3 장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제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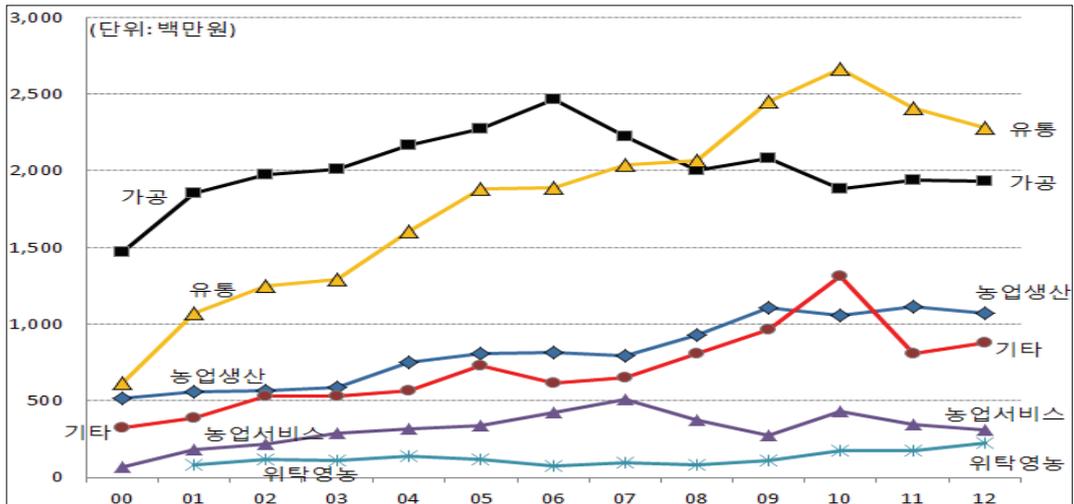
1. 농촌융복합산업 문제점

1.1.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실태

□ 농촌융복합산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체들의 성장은 정체됨

- 농촌융복합산업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농업법인들의 연도별 매출액 증가세가 최근 들어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가공, 유통, 서비스 부문 등의 총량적인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법인 수 증가에 따라 업체당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되는 상황임.
 - 농촌가공산업의 경영체당 매출액: ('06) 24.6억 → ('13) 19.2억
 -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온 유통분야도 2010년 최고치(24.5억 원)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

그림 3-1. 농촌융복합산업 법인당 평균 매출액 변화 추이



자료: 박준기 외(2014),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융복합산업 법인 간 역량에 따라 경제적 성과에서 차이가 확대되는 양극화 심화

- 판매 활동 규모에 따른 법인의 구성 비중에서도 소규모(연매출 1억 원 미만) 법인과 적자 법인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연간 매출액 1억 원 미만 법인: ('05) 560개(25.7%) → ('13) 4,628(39.1%)
- 적자 법인: ('05) 786개(36.1%) → ('13) 5,165(43.6%)

표 3-1.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따른 업체 구분

(단위: 개)

구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1억 원 미만 업체 수	10억 원 이상 업체 수	적자 업체 수	5억 원 이상 흑자 업체 수
2000년	512	332	565	13
2005년	560	734	786	44
2010년	2,494	2,126	2,687	152
2013년	4,628	3,308	5,165	186

자료: 박준기 외(2014),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가들은 역량의 한계로 인해 농촌융복합산업의 다양한 가치사슬 참여에 어려움을 보임.

- 농산물 가공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단순 가공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조, 세정, 절단, 혼합 등의 단순 가공작업 비중이 84.2%로 가공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함.

표 3-2. 농가의 농산물 가공 경영 현황

구 분		%	구 분		%		
가공 사업 운영 기간	5년 미만	7.8	가공시설 사용형태	단독 사용	89.0		
	5~10년 미만	14.3		공동 사용	2.1		
	10~20년 미만	28.7		일부단독 및 일부공동 사용	1.6		
	20~30년 미만	15.3		사용 후 사용료 지급	7.3		
	30년 이상	33.8	연중 운영기간	1~3개월 미만	38.3		
	모름/무응답	0.0		3~6개월 미만	40.2		
평균(년)	22.2	6~9개월 미만		11.7			
주요 판매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93.6	9~12개월 미만	1.6			
	출하	2.3	연중 내내	8.2			
	유통업체	1.6	평균(개월)	4.0			
	식품기업에 원재료 납품	0.9	가공원료 원산지	수입산	0.1		
	식품기업에 판매용 가공상품으로 납품	0.9		국 산	자가 생산	98.0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	0.2			구입	같은 시도	1.8
	직판장/직매장	0.2				다른 시도	0.1
	기타	0.1	가공형태	단순가공	84.2		
	모름/무응답	0.2		가공상품 생산	15.8		

자료: 농진청(2014). '6차산업 실태조사', 내부자료

- 농가가 수행하는 직거래의 경우는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 판매되는 단순 판매의 형태를 지니며, 자원의 융복합화나 가치사슬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의 발전적 형태로 보기 어려움.

- 농진청 실태조사결과 농축산물 직거래의 경우, 고객은 일반 소비자 개인인 경우가 94.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는 경로 1순위는 ‘지인의 요청’인 경우가 8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3-3. 농가 직거래 경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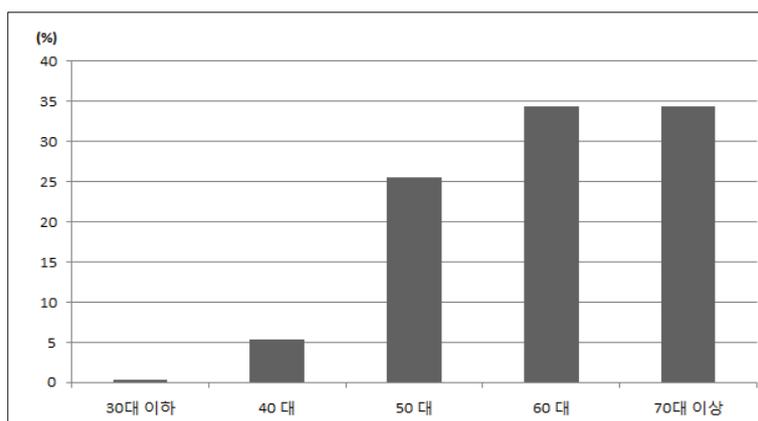
구분		%	구분		모두 (복수)	주 고객 (단수)
직거래 운영기간	5년 미만	6.6	주요 고객	일반소비자 개인	94.0	84.3
	5~10년 미만	14.0		유통업체	16.1	9.8
	10~20년 미만	33.8		생협 등 소비자협동조합	9.9	4.5
	20~30년 미만	17.1		식품제조업체	0.6	0.4
	30년 이상	28.5		외식업체	0.6	0.2
	모름/무응답	0.0		급식업체	0.5	0.3
	평균(년)	21.0		관공서	0.2	0.1
취급 품목 수	3개 미만	50.6		기타	0.4	0.2
	3~5개 미만	34.0		모름/무응답	0.1	0.1
	5~8개 미만	13.4		구분		1순위 (단수)
	8~10개 미만	0.5	주문 경로 (n=7,273)	지인의 요청	86.2	93.3
	10개 이상	1.1		관계기관 알선(소개)	3.6	12.6
	모름/무응답	0.4		지역단체 알선(소개)	3.7	12.0
	평균(개)	2.8		SNS 이용	1.0	3.6
농식품 공급방식	주문 공급	91.6		전화	1.7	3.4
	사전 계약재배	5.1		블로그/카페 이용	0.6	2.2
	두 가지 병행	3.0		홈페이지 이용	1.3	2.0
	기타	0.0	기타	1.7	2.6	
	모름/무응답	0.3	모름/무응답	0.4	0.4	

구분		%	구분		모두 (복수)	주 고객 (단수)
연중 운영기간	1~3개월 미만	27.1	취급품목 종류	신선농산물		74.3
	3~6개월 미만	41.7		가공식품	단순가공품	21.6
	6~9개월 미만	17.0	완전가공품		4.1	
	9~12개월 미만	4.4	취급품목 원산지	수입산		0.3
	연중 내내	9.7		국 산	자가 생산	99.0
	평균(개월)	4.7			구입	같은 시도
다른 시도				0.1		
직거래 운영형태	단독 운영	97.6	사업자 등록증	보유		7.5
	공동 운영	2.2				
	모름/무응답	0.2				

자료: 농진청(2014). '6차 산업 실태조사', 내부자료

- 다각화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들 중 고령농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농가 단위의 6차산업화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음.

그림 3-2. 농업관련사업 농가 경영주의 연령 분포



자료: 농진청(2014). '6차 산업 실태조사', 내부자료

- 농가의 고용자 특성 비율을 반영하여 전국 농업관련사업 농가의 고용 특성을 추정한 결과, 65세 이상 고용자는 총 336,478명으로 추정된 전체 고

용자 808,067명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농가의 고용 특성 및 전체 고용자 추정치

구 분		
전체 고용자연령 추정	65세 미만	471,589
	65세 이상	336,478
	전체	808,067

자료: 농진청(2014). '6차 산업 실태조사', 내부자료

- 6차산업화 참여 농가의 경우 경력이 오래된 경영주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고령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의 유입 및 양성이 요구됨.

표 3-5. 농가의 농업 종사 경력과 6차산업화 활동 참여 현황

(단위: %)

구 분		농축산물 직판장	농축산물 직거래	식당 경영	농축산물 가공업	농촌관광 (주말농원, 민박 등)
농가 경영주 종사 경력	5년 이하	4.9	7.2	8.8	7.0	9.7
	6~10년	9.7	13.4	17.6	11.9	18.5
	11~20년	15.7	17.3	<u>23.1</u>	19.0	<u>22.4</u>
	21~30년	19.0	<u>18.0</u>	<u>23.0</u>	<u>22.1</u>	<u>19.9</u>
	31~40년	<u>19.4</u>	17.4	16.5	18.9	15.5
	40년 초과	<u>31.3</u>	<u>26.8</u>	10.9	<u>21.2</u>	14.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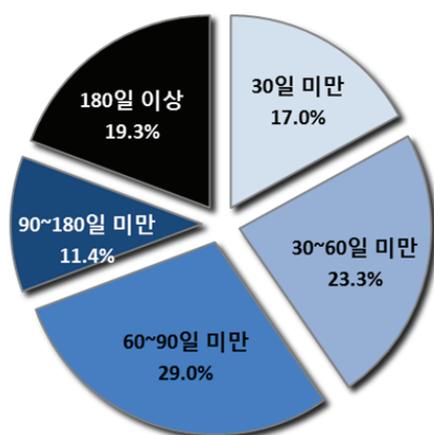
□ 농촌융복합산업 주체들의 정부정책 의존도가 높으며, 자생력이 취약

- 마을 단위 경영체라고 할 수 있는 “농촌관광 마을”을 지역개발 경영체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상당수 농촌관광 마을에서는 자립성이 미약한 실정이며 동종 업계 간 치열한 경쟁 및 저부가가치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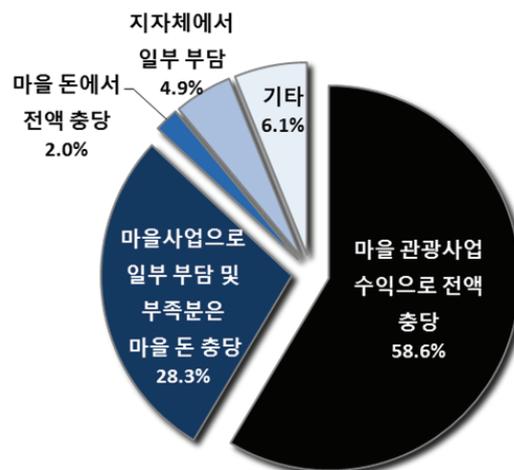
- 고부가가치 ‘휴양’ 보다는 저부가가치 ‘체험’ 중심의 사업에 치중하여 소득 증대 효과에 한계
 - 박시현 등(2012) 조사에 따르면 당일 방문이 56.6%에 달하며 당일 방문 당 평균 1.8만 원만 지출함. 반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 1인당 평균 비용 지출액은 8.7만원임.
 - 농어촌 관광마을의 주 방문객에서 학생과 단체의 비율이 59.6%에 달하는 반면, 가족 단위 소규모 방문객은 33.5%에 그침.
- 농촌관광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연간 숙박시설 운영일이 180일 이상인 비율은 19%에 불과한 반면, 약 69% 마을이 연간 세 달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만 시설을 운영 중임(박시현 등 2012).
 - 결과적으로 관광사업 수익으로 시설 유지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마을이 약 4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3-3. 농촌관광 마을 운영 현황

◆ 마을 공동 숙박시설 연 운영 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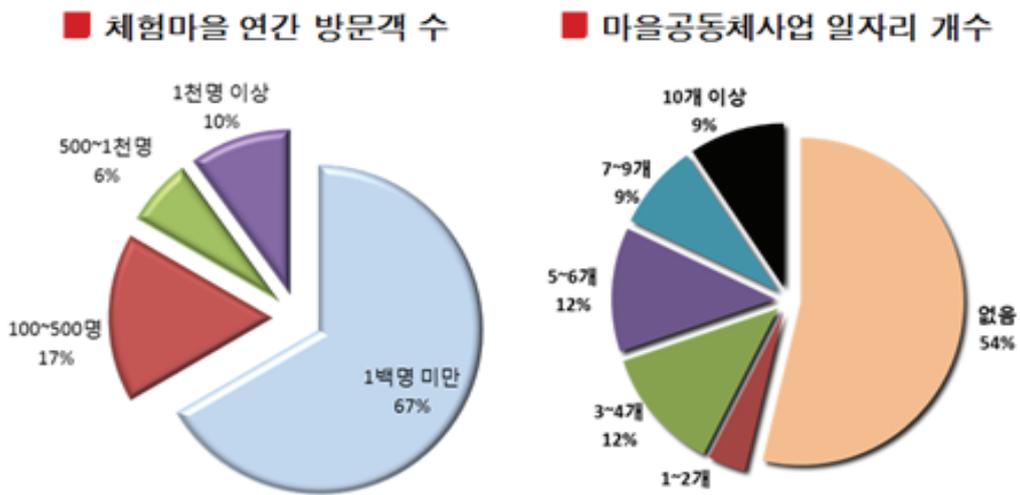
◆ 마을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충당



자료: 박시현 외(2012),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재구성

- 공동체 중심의 사업의 경우에서도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갖춘 마을은 많이 없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음.
-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을 타 시·군보다 앞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군의 경우도 자생력을 지니지 못한 마을 공동체가 다수인 것으로 진단

그림 3-4. ○○군 공동체사업 운영 현황



주: 전라북도 2015 마을 공동체 사업 통합모니터링 현장 조사 결과
 자료: 박준기 외(2014),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을 관련 지원사업 수행 324개 마을 중 상시 운영 마을은 103개(31.8%)에 불과
 - 83개(25.6%)의 마을은 운영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법인의 경우에도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법인의 자립 기반 마련이 미흡함.
 - 정부 지원에 의지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사업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의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줌.

- 매출액 상위 10%인 농업법인의 경우 하위 집단에 비해 자체 출자금도 많지만 정부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6. 농업법인당 출자금 및 정부 지원금

(단위: 백만 원)

구 분		매출액 기준 농업법인 구분			
		상위10%	10~30%	30~70%	하위30%
법인당 관련 지표	정부보조금 누계	389.4	233.8	163.6	104.7
	정부융자금 잔액	300.5	60.8	22.9	7.2
	법인당 출자금	787.3	351.5	218.6	148.7

자료: 박준기 외(2014),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책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기대한 성과를 얻는 데는 미흡하며, 예산사업 지원을 받은 이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해갈 수 있는 동력을 갖추지 못하는 업체들이 다수 존재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경우 참여 업체의 매출액 증가율 목표치를 매년 10%로 제시하였는데, 2010년을 제외하고 이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임.

1.2. 농촌융복합산업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 농식품 시장의 포화 및 소비자 수요의 변화

- 농축산물 소비량은 정체·감소 상태로 농업 생산량 증대를 통한 소득 확대가 어려우며, 기능성·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과 외식활동의 증가 등의 수요 변화 지속
 - 농축산물의 소비는 감소하거나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식량작물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2000년

93.6kg에서 2013년 67.2kg으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콩은 8.5kg에서 8.0kg으로 감소

- 총 가계지출 대비 외식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외식비 지출은 2010년 32만 원에서 2014년 월 37만 원으로 증가
- 국내외 식품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이며, 이를 선점하려는 주요국들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세계 식품시장('13): 5.2조 달러(연평균 3.9% ↑) / 국내('13): 157조 원(전년 대비 2.9% ↑)
- 소비자의 식품 선택기준이 다양화되고, 편의·건강·웰빙 트렌드*에 따라 식품시장이 세분화
 - 특정 소비계층(유아식, 노인식, 환자식 등), 다이어트 식품, 소포장 식품 등
 - 기능성 식품·안전한 식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3-7. 식품소비 소비자 인식조사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46.6%	42.4%	11.0%
전년대비 기능성식품 구입 주기가 증가했다	26.5	68.3	5.2%
식재료의 친환경 식품여부에 대한 관심이 있다.	32.7%	47.2%	20.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관광은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차별화, 고급화, 다양화를 통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함.
 - 2000년대 이후 농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 및 농촌관광 확대

- 농촌체험마을(개소 수): ('09) 544개 → ('13) 803
- 농촌민박: ('09) 16,681개 → ('13) 24,122
- 농촌체험 방문객 수: ('11) 6,917천명 → ('12) 8,842 → ('13) 10,517
- 연간 농촌관광 경험 정도: ('04) 7.7% → ('14) 14.8%
- 농촌관광 참여 주체, 인프라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역량 부족, 단조로운 프로그램 등으로 농촌관광의 성장기반 취약
 - 농촌관광 총량은 국내관광의 4.1%를 차지하나, 지출액은 1.4%에 불과
 - 농촌관광 재방문 의향: ('09) 61.9% → ('11) 70.4 → ('14) 65.3
 - 농촌관광 만족도 평가 결과, 자연경관(86.2점), 매력도(80.6) 등에 비해 친절성(73.4), 해설·안내(62.2), 불편사항 처리 정도(58.1) 등이 낮게 평가('14년, 농진청)

1.3.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추진 기반의 문제점

□ 농촌융복합산업 기초 현황 파악의 어려움

- 6차산업화의 성과에 대한 일부 추정이 가능하지만, 융복합산업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전체 규모의 추산에 어려움이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화”의 범주가 공식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음(김용렬 외, 2014; 농진청, 2014; 이성우, 2014).
 - 최근 수행된 농촌융복합산업화의 규모 추정 방법은 아래 표와 같으나 농촌융복합산업화의 대상 설정에 있어서 논쟁이 있어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
- 공통적으로는 농가와 농업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를 융복합산

업화의 주된 주체로 보고 있음. 먼저 농가가 농산물 가공, 직판/직매, 농가식당, 관광(체험 및 민박) 등을 농업생산 활동과 겸하고 있을 경우는 1차 산업의 융복합이 있다고 보고 있음. 농업법인체의 경우도 농업과 더불어 가공, 유통, 관광 등의 활동을 때 융복합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표 3-8. 선행연구에서 추정된 농촌융복합산업화의 규모 비교

		농진청(2014) ¹⁾	김용렬 외(2014)	이성우 외(2013)
융복합산업화 대상 설정 방식	농가	농업관련 사업 ²⁾ 을 하고 있는 농가 중 “농산물가공업, 농산물직판/직매장, 농가식당, 농가민박/체험관광 농가”만을 대상	6가지 유형의 농업관련 사업을 하는 농가 전체가 대상	6가지 유형의 농업관련 사업을 하는 농가 전체가 대상
	농업법인	농업 외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법인 중 농축산물 가공업, 농축산물 유통업, 기타사업(관광 및 음식점 등) 등을 대상으로 함	농업 외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법인 까지 포함한 것 중 농축산물 가공업, 농축산물 유통업, 농업서비스업, 영농대행업, 기타(농지분양 및 위탁판매, 관광 및 음식점업, 기타사업)을 대상으로 함	농업 외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법인 까지 포함한 것 중 2차산업(농축산물 가공업), 3차산업(농축산물 유통업, 영농대행업, 농업서비스업, 관광 및 음식점업, 기타사업 ³⁾)을 대상으로 함
	지역개발경영체	(포함하지 않음)	(포함하지 않음)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사업, 농촌관광체험마을, 농가맛집, 농촌교육농장,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복합자원화지원사업, 지역전략시품산업육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산촌생태마을사업 등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개발경영체를 모두 포함
추정 자료 및 추정 방법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2012년 농업법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표본조사(농가 9,033호, 법인 1,001개)한 뒤 모수 추정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및 2012년 농업법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및 2011년 농업법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	

		농진청(2014) ¹⁾	김용렬 외(2014)	이성우 외(2013)
차별성	대상	농가 부분: 직거래 및 농기계작업대행 제외 농업법인: 농지분양·위탁판매업, 용수공급업 등의 사업체 등은 조사에서 제외	농가 부분: 농업관련 사업의 모든 부문을 집계 농업법인: 농업생산수입만 있는 법인을 제외하고 모두 집계	농가 부분: 농업관련 사업의 모든 부문을 집계 농업법인: 농업생산수입만 있는 법인 제외하고 집계 지역개발 경영체: 각종 정부사업으로 생성된 경영체를 포함함
	특이점	6차산업화와 관련성이 적은 농가의 직거래, 법인의 농지분양 및 위탁판매업 등을 제외	농가 부분을 중복집계 ⁴⁾	지역개발 경영체를 포함
추정치	농가	70,551	162,640	151,515
	법인	7,944	8,493	6,033
	지역개발	-	-	3,256
	합계	78,495	171,133	160,804

주 1. 농진청의 조사는 2014.12.에 완료된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의 내용이 수정 보완된 내부 자료임.

주 2. 농림어업총조사 상의 농가 농업관련사업은 농축산물직판장, 농축산물직거래, 식당경영, 농축산물가공업, 농기계작업대행, 농촌관광사업(주말농장, 민박경영 등)임.

주 3. 기타사업은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등의 사업을 말함.

주 4. 전체 조사 모집단은 151,515 농가이나 농업 관련 사업을 중복응답하였기 때문에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남. 즉, 162,640 농가는 중복집계된 결과임.

□ 지역 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추진 체계가 구축되었으나, 현장밀착형 지원에는 한계

- 광역지자체별 6차산업화 활성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의 다양한 6차산업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정책 수단의 부재
 - 지역단위 지원조직(도 농정국, 도 농업기술원, 6차산업 지원센터 등) 간 칸막이로 인해 지역 단위의 협력에 기초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

이 있으며 이는 정책 성과 저하로 이어짐.

- 도 농정국은 주로 자체 또는 지특 사업을, 도 농업기술원은 농진청 사업을, 6차산업 지원센터는 농식품부 사업을 추진하며, 주체들 간 사업의 조정이나 협력을 위한 채널 부족
- 농식품부, 농진청의 경영체 컨설팅, 판매지원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성이 있으며, 창업에서 기술사업화 시장 정착에 이르는 일련의 창업 보육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흡

2. 농촌융복합산업 개선 과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 대상의 명확한 규정 필요

-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본 개념만으로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해야 할 대상들을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농업·농촌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이 없는 단순 가공이나 유통 부문의 주체들을 구분하기 어려움.
 -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농촌융복합산업의 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대상 및 산업의 범위 구분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하여 정책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함.

□ 시장 경쟁력이 취약한 농가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은 개별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역량이 열악한 농가, 경영체의 경우 개별적인 사업 다각화 추진에 어려움이 따름.
 - 농가들의 경우 직거래·직판 같은 활동의 참여는 높지만, 자본, 기술, 마케팅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활동들은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 제한이 있음.
 - 농가식당, 가공, 농촌관광 등의 활동들은 1% 미만의 농가만이 수행하고 있음. 농촌관광 활동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증가 폭도 크지 않음.
- 개별 주체들의 다각화와 더불어 주체들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농가, 경영체의 6차산업화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
- 로컬푸드 중심의 농가·경영체 조직화와 같이 개별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제 모색 필요

표 3-9. 농촌융복합산업 참여 형태 설문조사 결과

6차산업화 추진 방식	응답자(명)	비중(%)
농가 독자적으로 추진	92	24.2
기존 민간기업과 거래관계 형성	32	8.4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	90	23.7
로컬푸드를 통한 판매, 가공, 체험프로그램 참여	156	41.1
기타	10	2.6
계	380	100

자료: KREI 통신원 대상 6차산업화 인지도 및 수요 관련 설문조사(2015)

□ 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주체 육성 필요

- 그동안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은 제품·서비스 가치사슬이나 참여 주체들의 시장 내 위상이나 경쟁우위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지원 수단을 적용하고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부문에 참여하는 농업법인들의 연도별 매출액 증가세가 최근 들어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관련 사업체 증가와 지역 간 경쟁 격화로 일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우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됨.

- 농촌의 지역제품·서비스의 속성이나 경영체들의 역량, 지역의 특화도 등에 따라 산업육성정책의 관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제품군을 육성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이고 농촌융복합산업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 시장 경쟁력이 우수한 제품군이나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의 효과적 정책 추진체계를 수립해야 함.

□ 농촌융복합산업을 매개로 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추진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인구집단의 농촌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유지기반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이와 관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외연 성장과 더불어 공동체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성과 목표 검토 필요
 - 기존 6차산업화 정책의 경우 대부분 매출 등 정량적 지표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등 경영체 및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증 사업체의 관리에도 양적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표 3-10.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부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사업명
매출액(소득액) 증가율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육성사업(전북) 외
일자리 증가율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시범사업
사업지원대상 수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말산업육성사업,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 인증제도 운영 및 사업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목표 설정 및 그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선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 농가와 법인 등 경영체 유형에 따른 정책 수요가 다르며,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경영체별로 가장 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가의 경우는 인력 수급 문제와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정책에 방점을 두어 정책을 개발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을 유지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 지원이나 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정책 발굴이 요구됨.
- 농촌공동체회사,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체험·관광, 융복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마을 공동체가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일부 사업의 경우 우수한 역량을 갖춘 경영체라 할지라도 원천적으로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이 낮은 공동체들에 대한 무분별한 하드웨어 지원사업은 지양해야 함.
-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경영체 육성과 지역자원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기본계획을 통해 지원대상의 유형 등 주체들의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방식을 제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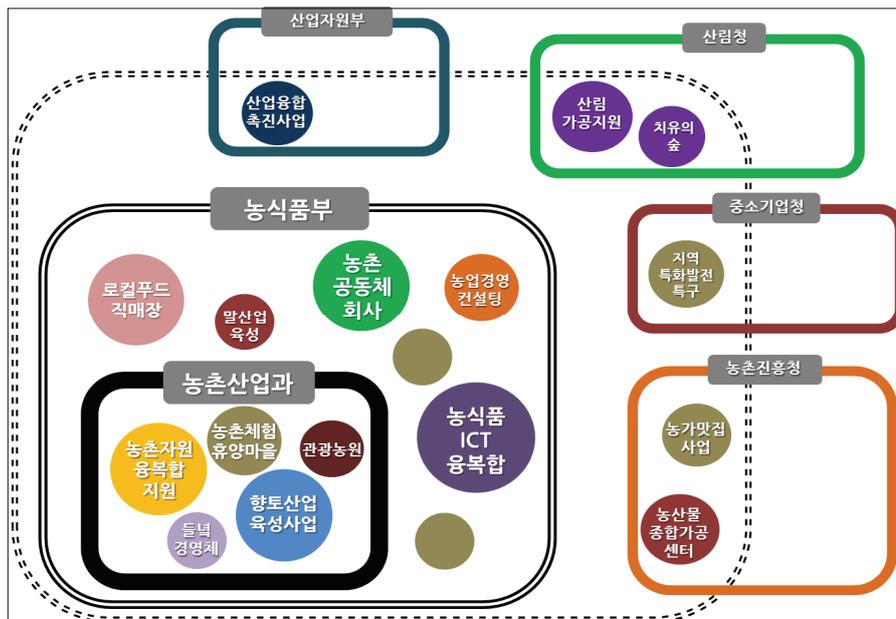
□ 지역 단위의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 정책 기획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
 - 광역 단위로 운영되는 6차산업화 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지역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전개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 수단을 조직하는 지역거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과제 수립이 필요함.

□ 유사 사업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역할 및 부처 간 효과적인 업무분담 방안 수립 필요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농촌산업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농식품부 내 타부서나 타 부처에서도 관련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그림 3-5).

그림 3-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부 사업 및 주관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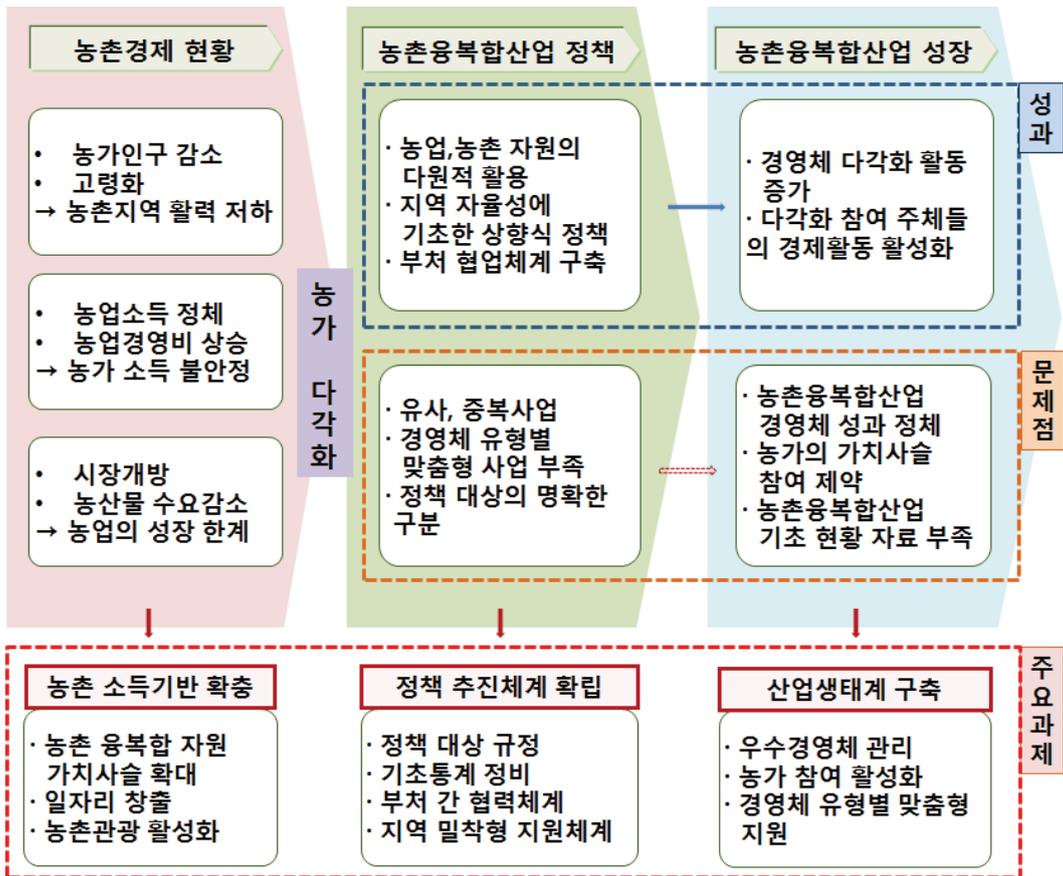


- 아울러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하여 정부-지자체 간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 역할과 기능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함.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주체들 간 기능 분배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기본계획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의 목표와 더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개선과제를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 농촌융복합산업 실태 진단결과 도출된 과제들은 그림 3-6과 같이 농촌 소득 기반의 지속적인 확충,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추진체계 개선, 농촌융복합산업 주체들의 경쟁력 확보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내용에서 각 유형의 과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침체 경로에 접어든 농촌 경제의 대안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이 가지는 목표를 반영하여 농촌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 제시
 -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농촌 기반 융복합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과제
- 기존에 추진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개선 과제들을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로 포함
 - 농촌융복합산업의 정책 대상을 구체화하고 기초 현황 파악을 위한 과제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방안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 추진 결과 나타나는 경영체들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 제시
 - 우수 경영체 인증제도의 내실화 방안
 - 농촌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을 비롯하여, 고령농 등 상대적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농가들의 농촌융복합산업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 방안
 - 창업·보육, 판로 개척 등 경영체 유형별 지원 방안

그림 3-6. 농촌융복합산업 실태 진단을 통한 정책 과제



제 4 장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방향

1.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대상

1.1.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범위 설정의 필요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대상 규정 필요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기초 현황 파악을 위한 대상 구분 필요
 -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생산 주체, 산업 분류, 제품 등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한 정책 대상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유사 사업이 각기 다른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정책 대상을 규정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 대상 주체 및 경제활동 행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준용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상 기준 마련 필요
- 6차산업화 지원 정책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을 확인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미비가 문제점으로 확인됨.
 - 기존의 통계자료만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정확한 특성을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범위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이 수행되어야 함.

1.2.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대상의 요건

□ 농가소득 제고와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를 고려한 정책 대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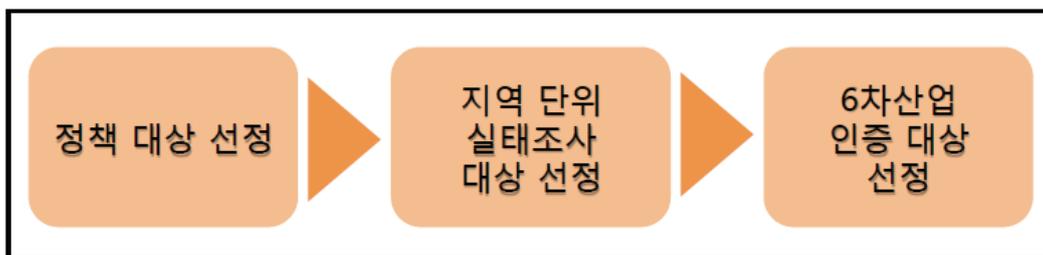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생산활동의 영역 및 정책의 추진 이념을 고려한 주체, 지역 연계 정도를 기준으로 설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 대상 요건

- ① (주체) 중소기업 이하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역에 뿌리내린 주체들을 정책 대상으로 선정
- ② (융합)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이 2차, 3차 산업과 결합되는 행위
 - 농업·농촌자원의 다원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제 활동으로 한정

- ③ (산업 범위) 지역농업의 생산행위가 포함되는 활동
 - 농업·농촌의 생산행위에서 파생된 융복합 활동을 포함
- ④ (농촌지역 연계) 농어촌 지자체 및 농촌을 무대로 활동하려는 주체들이 추진
 - 가치사슬이 지역 내 착근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한 경우
- ⑤ (효과성) 융복합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
 -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로 한정

그림 4-1. 농촌융복합산업 정책대상 기준의 선정



1.3.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대상의 선정 기준

□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대상 선별

① 행위주체 유형

-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혹은 1인 창조기업

* 단, 지역농가,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또는 주민공동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가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함.

② 경영체의 생산활동 영역

-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합을 통해 차별화되는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
- 단순 가공(제현, 정백, 제분, 세척, 건조), 단순 포장은 제외
- 지역 농업의 생산행위가 포함되는 활동(지역농산물 일정 비중 이상 이용)
- (농산물 기반) 1차 농산물 생산(자가생산·계약재배·수매 등)을 통한 2차, 3차부문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 농식품 가공, 농가민박, 농가레스토랑, 농장체험 등
- (무형자원 기반) 1차 농산물 생산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2차, 3차부문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 공예, 농경문화체험, 치유, 농촌형 컨벤션 등
- 판매·가공·체험시설 보유 및 운영

③ 주체의 입지 및 지역농업과의 연계

-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화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를 선별
 - 주된 사업장이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상의 농촌지역에 입지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들과 주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경영체
- 가공품 및 체험 등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활용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중 일정 비중 이상이 동일 지역(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

④ 경영역량

- 정책의 효과성 등을 고려, 6차산업화 관련 생산활동을 통해 양질의 제품·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영체를 정책 대상으로 선별

- 6차산업화 관련 일정 기간 이상의 생산활동 추진 실적이 있는 경영체
- 6차산업화 관련 연매출이 발생하는 경영체

1.4.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운영을 통한 우수 경영체의 선별 및 관리

□ 인증제 도입·운영으로 우수경영체를 선별, 농촌융복합산업 선도 모델 제시

- 우수경영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실시와 관련하여 정책 대상의 요건 및 정책 대상 선정 기준을 고려한 인증 기준을 도입하고, 우수 경영체 관리 및 선별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선도 모델을 제시
- 인증경영체 자격 요건(인증 대상)³
 - (대상 주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 주된 사업장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상의 농촌지역에 입지
 - (사업 영역)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 *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 발생을 기준으로 함.
 -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

3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계획

- 인증의 갱신 및 취소 기준 설정을 통한 인증 경영체 관리
 - 6차산업화 관련 사업 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유지
 - 경영체의 사업 활동이 인증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인증 취소
 - 경영활동조사 상의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인증사업자의 갱신 여부 판단
 - 매출액 - 일정 수준 이상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액(연평균 1%)
 - 고용 - 지역주민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

2.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방향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 설정
 - 농업 및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계획과의 내용적 정합성을 유지하며, 중앙정부 및 지역 차원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중점 정책과제들을 제시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개선과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과제 반영
 - 기초통계 정비, 지원체계 확립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관련 체계적인 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추진
 - 농가, 경영체 등 농촌융복합산업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추진
 - 소비자 인식 제고, 지역단위의 자생적 산업발전 기반 구축, 경영체 성장 단

계를 고려한 지원 방안 모색

- 농촌융복합산업의 다양한 가치사슬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경영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
 - 식품·가공, 농촌관광, 산림관광, 말산업, 곤충산업 등 부문별 현황 진단에 기초한 지원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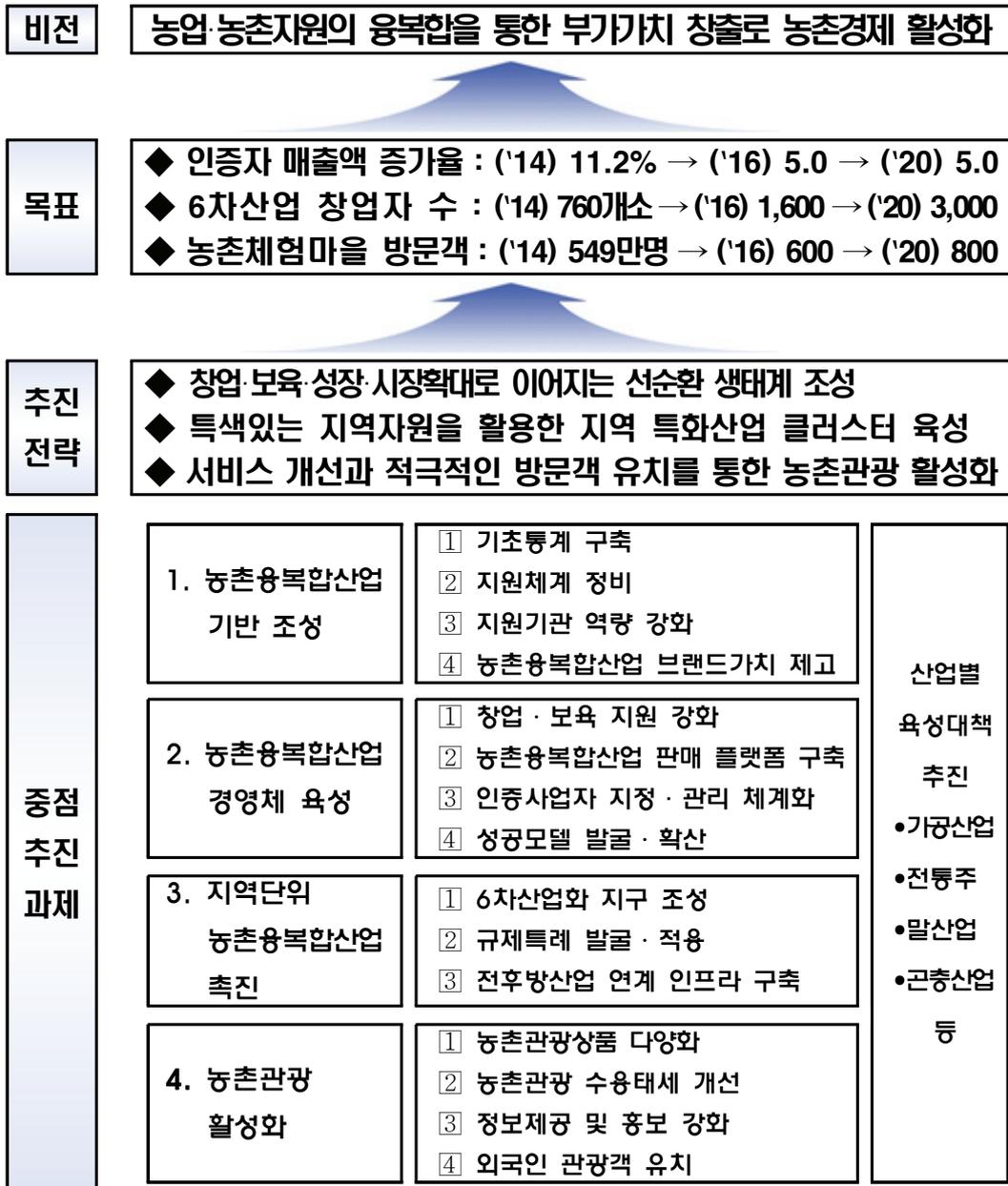
□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 농업·농촌자원의 다원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 경로를 농촌지역에 이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 소득 제고 -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 - 농촌공동체의 유지 및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정책을 꾀함.
- “농업·농촌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비전 아래, 6차산업화 정책의 추진 경과와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가치사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3대 정량적 목표 설정
 - 인증자 매출액 증가율: ('14) 11.2% → ('16) 5.0 → ('20) 5.0
 - 6차산업 창업자 수: ('14) 396명 → ('16) 1,600 → ('20) 3,000
 -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14) 549만 명 → ('16) 600 → ('20) 800
-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6차산업 창업·보육·성장·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둘째,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며, 셋째, 서비스 개선과 적극적인 방문객 유치로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출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추진 과정의 개선 사항과 쟁점들을 고려하여 6차산업화 기반 조성, 6차산업화 경영체 육성, 지역단위 6차산업화 촉진,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15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

- 농촌융복합산업의 다양한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가공, 전통주, 말산업, 곤충산업 등의 산업별 육성 대책을 별도로 제시

그림 4-2.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추진과제



제 5 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1. 농촌융복합산업 기반 구축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초 통계 구축 필요

- 농촌융복합산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산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함.
 - 명확한 기준에 입각하여 농촌융복합산업 대상을 구분하고, 기초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자료 구축 등이 요구됨.
-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의 정확한 규모 및 경영체 유형별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지역별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지역자원 및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사 필요

- 기초 실태조사 결과와 병행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시장 현황 및 정책 성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경영체 운영 주체·매출 규모·사업 유형별 비율, 지역자원 분포 및 지역농산물 사용 비중 등 분석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도출
 - 경영체 및 매출액 증가율,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구축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 및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 지자체의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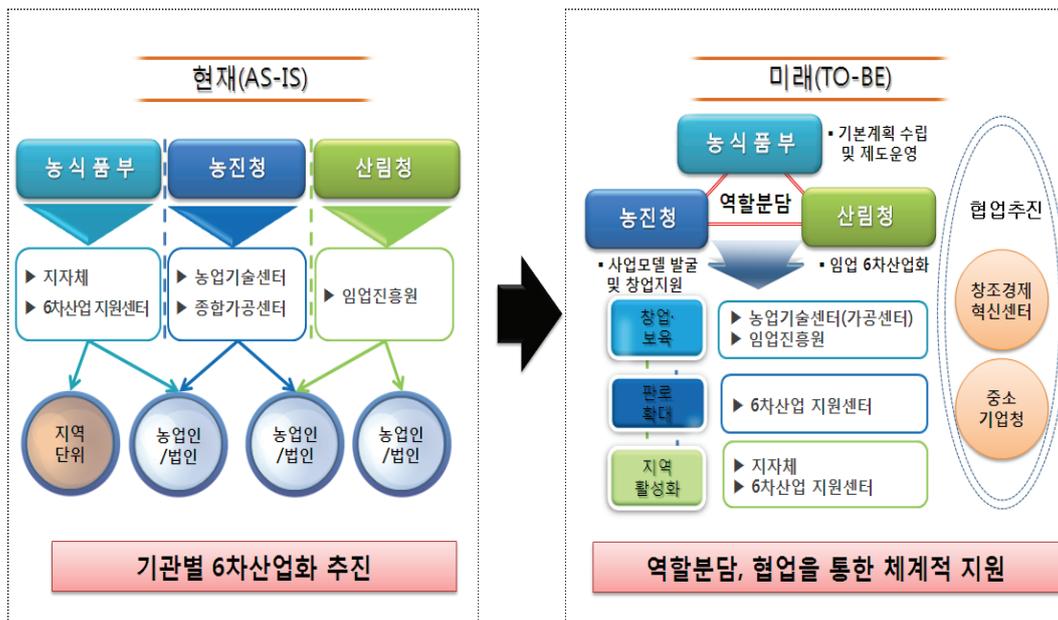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

- 정책 추진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추진 주체 간 협력에 기초한 명확한 역할 분담 필요
 -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중복 추진을 방지
 - 농식품부는 정책 총괄, 농진청은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 활성화, 산림청은 산림 분야 6차산업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역 단위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간 협업 방안 모색
 - 지역별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이나 정책들을

모색하는 사례가 있지만, 일부 지자체로 한정되어 있음.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육성 정책을 기획·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농산물가공센터,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임업진흥원 등 지역에 입지한 중간지원조직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효과적 지원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등 농업 부문외 지역산업 지원기관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벤처, 중소기업 등 다양한 지역 생산 주체들의 농촌융복합산업 가치사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그림 5-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연계·협력에 기초한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주체들 간 네트워크 활성화
 -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성공사례 공유 및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채널로 활용

- 각 생산 주체 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협의체를 운영하여, 주체들 간 다양한 연계·협력 관계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
 - 특히 지역 단위에서 주체들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협력 관계 형성의 기회로 활용
-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6차산업지원센터의 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 대응 역량 강화
 - 지원센터 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인력을 충원하여, 조직과 기능을 확대
 - 현장지원인력 대상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경영체에 대한 지원 역량 제고를 꾀함.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

- 농촌융복합산업 확산에 대응하여 지역 단위의 효과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전문기관의 역량 강화 필요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별 6차산업지원센터의 지역 정책 기획 기능 확대
 - 성과평가 및 자율공모사업을 도입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센터 간 경쟁을 유도하여 정책 역량의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농촌융복합산업의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농민과는 달리 ‘6차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며,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및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

- * 6차산업 인지도('14년): 농업인 96%(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소비자 37%(농식품부 조사)

- 농촌융복합산업이 가지는 가치에 기반한 'BI(Brand Identity)'를 활용하여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가치 소비를 유도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지향적인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BI'를 개발하고, 대국민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소비가 가지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 도시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ex)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을 지역 아동·청소년 식생활 교육 현장으로 활용

※ (관련 사례) 맑은샘자연교육농원(전북 정읍시)

- 채소류 가공식품 제조 및 식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채소로 구성된 채소잡곡, 채소차 등의 가공식품을 제조·판매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식단('채소밥상')을 개발하여 좋은 식단의 중요성을 알리고 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품평회, 판촉전 및 안테나숍 등 각종 판로개척 사업에서 6차산업 인증사업자 제품의 통합브랜드로 활용

-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단위의 소비 확대 전략 수립
 - 축제 기간 중 농촌융복합산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로컬푸드 및 지역 농수산물 유통 기관과 연계한 제품 판매 등 지역 내 유통 기능과 연계한 소비 촉진 방안 모색

ex) 지역별 6차산업화 지도(체험마을, 가공특산품 등) 제작·배포

※ (관련 사례) 지평선축제 체험마을 투어(전북 김제시)

- 축제 방문객 대상으로 농촌체험마을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고향에서 하루!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김제시 소재 백구로컬랜드, 용지향토마을, 궁지호박마을 등 체험마을 5개소에서 관광객들에게 체험 및 숙박 프로그램 제공(‘15년)

2. 농촌융복합산업 우수경영체 육성

□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위한 창업·보육지원 강화

-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하여 혁신적 생산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산업 저변 확대 노력이 필요
 - 청년, 귀농·귀촌인 등 새로운 인적자원들의 농촌융복합산업 가치사슬 참여를 유도
 - 새로운 인력의 농촌 유입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의 활력 제고 기대
- 신제품·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창의력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농식품벤처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창업 희망 주체들로 하여금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

- 경영체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강화 및 우수 경영체 멘토링 제도 운영
 - 경진대회 수상자 등 우수 경영체가 중소 경영체를 코칭하는 멘토링 제도 운영을 통해 창업기업 및 신생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
 - 지역, 품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유형이 유사한 경영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사업 기반 형성 지원

- 지역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경영체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창업 코칭, 시제품 생산 및 판로 등 창업 과정 지원
 - 시·군 가공센터 지속 확대 및 노후화된 가공시설 개보수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역 생산 거점으로 활용
 - 관련 소양교육(식품위생법, HACCP 등 인증, 경영, 포장, 마케팅 등), 가공기기 사용 방법, 아이템 및 제품 개발·상품화 등 창업교육 진행, 시제품 생산 지원 등을 통해 생산 주체들의 경영활동을 지원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인증사업자 등 우수경영체와 연계하여 청년 대상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 인력의 경영체 취업 및 새로운 청년 인력의 농촌융복합산업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업·농촌 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해외 선진사례 견학, 선진기술 벤치마킹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
 - 농업 관련 대학과 연계하여 6차산업화 관련 교과과정 개설 및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업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인 맞춤형 6차산업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기반의 경제활동을 통한 귀농·귀촌인의 지역 조기 정착 지원

- 6차산업활성화 자금 및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각종 조사 결과 판로개척과 더불어 자금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인증사업자 등 우수 경영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 우수 경영체 인증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통해 정책 성과를 높이고, 농촌융복합산업의 확산을 위하여 인증제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 지역 농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경영체를 인증사업자로 선정·우선지원
 - 인증경영체의 경우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6차산업활성화 자금, 컨설팅, 판로개척 및 홍보 등 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표 5-1. 6차산업 사업자 인증 기준

구 분	내 용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농업인·법인,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협동조합 등 ●(입지) 주된 사업장이 「농어업·농업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상의 농촌지역에 위치 ●(사업영역) 식품 제조·가공 및 이를 직접 판매하는 산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외식 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주원료는 해당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할 것 - 최근 2년간 사업 성과(매출액)가 있을 것
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차산업 적합성, 혁신성,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및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인증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시행
 - 인증사업자를 경영체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기본 현황에 대한 DB 구축
 - 인증 시기, 추진 주체, 사업 유형,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경영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사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인증제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출, 고용 창출, 경영 성과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인증 경영체의 갱신, 취소를 결정
 - 인증은 3년마다 갱신하고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증가율 1%(연평균) 이상, ② 지역주민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시 갱신

- 인증사업자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경영 성과, 애로 사항 조사 등 인증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관리
 -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현장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6차산업자 버킷리스트 작성·관리

□ 농촌융복합산업 소비 확대를 위한 판매 플랫폼 구축 및 대국민 홍보

-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주체들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에 대한 다양한 조사 결과 판로개척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음.
- 새로운 유통 트렌드에 대응하여 온·오프라인 판매플랫폼을 개발하고, 경영체들의 활용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함.
 - 인증사업자 대상의 전용 온라인 판매관 개설·운영
 - 공영홈쇼핑을 활용한 대량생산 가능 제품 판매 추진
 -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체험마을, 관광상품 판매 및 홍보

- 기존 유통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안테나숍 개설
- 코레일 유통망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상품 및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연계 판매 추진
-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 다양한 매체 및 유통경로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서비스의 홍보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전용 유통경로 등 다양한 판로 개척
 - 유통채널별 입점설명회를 개최하고, 포장·디자인, 마케팅 등 제품 컨설팅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를 위한 웹카달로그 제작 및 배포
 - 농촌융복합산업 포털사이트(www.6차산업.com)를 통해 상시 정보 제공과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행사, 기념품 제작 등에 활용토록 대기업, 공공기관 및 협회 등에 배포
 - 유통바이어 등이 참여하는 품평회 및 기획 판촉전 등을 통한 우수제품 발굴·판매 촉진

□ 성공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저변 확대 및 농가 인식 제고 추진

- 농촌융복합산업의 농업 현장 확산을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와 중앙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고민하는 경영체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경험을 공유
 -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성공스토리, 혁신성 등을 고려한 ‘이달의 6차산업인’을 선정하여 여타 경영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
- 언론, SNS, 사례집 제작 및 팸 투어 개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체계

적인 홍보 활동을 벌임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농업 경영체들의 인식 제고를 꾀함.

- 언론사의 기획기사, 기고문,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정책 및 사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 우수 사례는 ‘www.6차산업.com’에 등록하고 기자단 및 농업인 등 대상 현장 팸투어 개최

3. 지역 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 6차산업화 지구 조성 및 지역 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활성화

- 농업 생산력 확대, 전후방 연계산업의 가치 창출 능력 확대 등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
 - 단순 생산활동 집적이 아닌 지원 기능, 연구개발 기능 등이 공존하는 거점 공간 조성으로 집적이익에 기반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의 창출이 가능
- 농산물 생산·가공·관광 등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주산지를 ‘6차산업화 지구’ 지정하여 집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지역 거점으로 활용
 - 기존 지역 농업의 특화 품목 등과 연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집적과 성장이 나타나는 곳을 ‘6차산업화 지구’로 선정·활용
 - 자원 집적도, 연관산업 인프라, 정책 간 연계성, 사업 추진체계 및 문화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공동인프라 조성, 지역 산업 발전단계를 고려한 특화 지원 사업 추진
 - 지역 내 주체들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상호 협력 기반의 개방형 혁

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

- 지역 특화자원과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 가치사슬 개발을 촉진
 - 지역 내 민간 주도의 협력 관계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경영체의 역량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지원
 - 이를 위해 지원센터를 비롯한 농업 관련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
 - 핵심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 육성을 꾀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거점 지구 조성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 지구별 전담 지원 인력을 두고 6차산업화 지구 사업의 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주체들 간 네트워크 중개자 역할 등을 수행
 -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방안 제시 등 경영 컨설팅 업무 수행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규제 특례 발굴·적용

- 자원 융복합 및 가치사슬 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생산활동의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농촌융복합산업 생산활동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법」 상 의제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필요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농촌융복합산업의 생산 활동과 관련 있는 식품가공, 숙박업 전반에 대하여 생산 활동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
- 6차산업화 지구와 지역특구를 연계하여 지구 단위 규제특례 적용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지구는 특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꾀함.
 -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32조에 따라 지구 지정 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역특구법」 제9조에 따른 특구 지정이 의제되어 규제특례 적용 가능

※ (관련 사례) 순창 장류지구

-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구 내 식당·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지역특구 계획 변경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지역특구법」에 따른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 특례 적용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동반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연관 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 필요
 - 기존의 농촌산업 기반을 농촌융복합산업 인프라로 활용하고, 지역 내 새로운 가치사슬이 착근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연계가 가능한 연관산업 인프라를 파악하여, DB 구축을 통해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이용 편의 제공

-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설치된 제조·가공시설, 유통시설 등을 조사하여 필요로 하는 경영체들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
 - 6차산업 지원센터를 통해 가공·유통시설 이용 희망자와 이용 가능한 시설을 연결하여 지역 차원의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집적 기반인 특화농공단지의 고도화 추진 필요
 - 산업집적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및 개별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자원 중심의 융복합화 촉진(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특화농공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식품산업을 비롯한 6차산업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 육성으로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융복합산업 관련 유사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향토산업육성, 지역전략산업육성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4.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관광 상품 다양화 필요

-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관광 프로그램의 고도화 필요
 - 농촌의 생태적 가치를 활용한 관광자원 발굴
 - 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확대하고, 산림 내 캠핑·레포츠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한 기반시설 조성
 - 지역 내 향토문화 등 무형자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음식관광

의 고부가가치화

- 전통주, 향토음식 등과 연계한 향토음식 투어 상품화 추진
- 고택·종택·사찰을 활용한 음식 체험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개발

- 민·관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
 - 코레일의 철도인프라를 활용하여 체험마을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으뜸촌 관광여행’ 등 상품 개발
 - 민간여행사 공모를 통한 농촌관광상품 개발·운영
 - 지역 농촌관광 주체(체험마을, 농가맛집, 찾아가는양조장, 관광농원 등) 간 자발적인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집합적 활동에 기반한 공동 관광상품 개발 지원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촌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협업과제 추진
 - 기존 관광 활성화 방식 외에 혁신을 통한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지원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

ex) (전남) 남도음식테마, (전북) 전통주테마, (경북) 명품고택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상품화 추진

□ 농촌관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 수용태세 개선 시급

-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농촌관광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 품질 제고가 요구됨.
 - 농촌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우수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상품권 도입 및 사무장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민간 부문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관광의 편의성 제고
 - 민간 여행 사이트 활용, 농촌체험마을 예약서비스 지원 확대
 - 카드사, 항공사 등 포인트를 활용한 농촌관광상품 판매 추진
 -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 및 마을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상품·음식 등 개발 지원을 통해 관광 마케팅 활성화
- 농촌관광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및 보험가입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체험마을안전관리 매뉴얼」 보완
 -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소방안전·식품위생·서비스교육 의무 실시
 - 체험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화재보험 가입 유도
- 농촌관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강화**
- 다양한 농촌관광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적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다양한 농촌관광자원을 통합관리(DB 구축)하고, 우수관광자원 집중 홍보
 - 매월 계절·테마별 농촌체험마을을 선정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홍보 및 마케팅 실시
 - 우수 관광자원을 모바일 메신저 및 SNS 등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젊은 소비자들 대상의 효과적인 홍보 실시
 - 도시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심 내 상설 체험홍보관 운영
 - 주요 포털 모바일 홈페이지 및 플랫폼을 활용한 농촌관광지 홍보
 - 포털사이트 테마지도 구축 병행
 -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숙박, 특산물 구매가 가능한 예약·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외국인의 고유한 선호도를 고려한 전용 관광상품 개발 지원
 - 인센티브 관광 등 지역별, 계층별 수요 타깃형 교류 활성화 추진
 - 농촌개발 관련 연수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개발도상국 대상의 특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 국가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 ex) 「1만 유커 유치 프로젝트」
 -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 농촌의 청정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홍보
 - DMZ 역사 탐방, 건강 증진(홍삼 생산지) 등 유커 선호 유형별 맞춤형 농촌관광 상품을 여행업계와 협업하여 개발
- 해외 현지설명회, 팸투어 개최 등을 통해 한국농촌관광 상품 홍보
 - 한국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20여개의 주요 해외 여행사의 상품 기획 담당자 대상 농촌관광 콘텐츠 홍보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상품 개발을 위한 농촌관광 콘텐츠’에 대한 관광정보 및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여행코스를 중점적으로 소개
 - 농촌관광상품에 대한 상품화 의향, 해외 수요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 문체부, 농어촌공사와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설명회 개최
 - 현지인이 선호할 만한 관광자원을 엄선하여 정보 제공
 - 한국 농촌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농촌관광 팸투어 운영(분기별)
-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농촌관광의 홍보 채널로 활용
 -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해 농촌관광 정보를 현지 주요 SNS 채널을 통해 제공
 - 농촌관광에 관심이 많고 출신국 주요 SNS채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서포터즈 모집

- 농촌관광코스 팸투어(3개월간 총 6회 개최)에 총 3회 참가 후, 후기와 이미지·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개인 SNS채널을 통해 홍보 장려
- 주민교육을 통한 서비스 수준 강화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
 - 국제관광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의 관광시스템의 국제화 교육 실시
 - 한국관광공사, 여행사와 연계한 공동 마케팅 확대
-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관광주간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추진
 - 외국인 전용 농촌관광 안내리플렛 및 책자, 쿠폰북 등 제작·배포
 - 팝업스토어를 통해 홍보 및 체험, 이벤트 진행

※ (사례) 의야지바람마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강원 평창군)

- 마을체험프로그램이 60여개 민간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에 포함되어 연간 7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매출액 63억 원)
-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9만7천명) 중 75%가 의야지마을 방문('14년)

부 록

6차산업화 인지도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6차산업화 정책 관련 농촌 주민의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농촌의 6차산업화 관련 정책 수립 및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설문지는 파기됩니다.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015.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응답자 기본 사항

연 락 처 :

응답자 주소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SQ 1) 귀하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문 1
- ② 아니오 ->죄송합니다. 귀하는 본 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1. 귀하께서는 농촌의 '6차산업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문 1-1로
- 2. 없다-> 문 2로

1-1. 농촌의 "6차산업화"라는 개념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잘 모른다
- ③ 조금 안다
- ④ 잘 안다
- ⑤ 매우 잘 안다

'6차산업화' 란?

-> 농업농촌 자원(1차)과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 관광 등 2, 3차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2. 귀하께서는 현재 농축산물 생산 외에 생산물을 제조·가공하거나 소비자에 직접판매, 농촌체험관광 등의 부가적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 ① 하고 있다. -> 문 2-1
- ②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다. -> 문 3
- ③ 전혀 한 적이 없다. -> 문 3

2-1. 귀하께서 하고 계신 농축산물 생산 외에 부가적인 사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농축산 식품 가공
- ② 식품외 농산물 가공
- ③ 농축부산물 가공(비료 등)
- ④ 농축산식품 직판/직매
- ⑤ 농가식당
- ⑥ 농가 민박
- ⑦ 체험 농장
- ⑧ 관광농원
- ⑨기타(적어주세요_____)

2-2. 그렇다면, 농축산물 생산 외에 농업과 관련된 부가사업을 시작하신지는
대략 몇 년이나 됩니까? () 년

2-3. 농축산물 생산 외의 부가활동이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많이 그렇다 ⑤ 매우 많이 그렇다

3.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농업과 농촌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자는 3-1 문항의 답변 불필요)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조금 안다 ④ 잘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3-1. 그럼, 정부의 6차산업화 정책에 관한 정보는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TV, 신문, 라디오 뉴스 ② 시·군의 농업담당 공무원 ③ 조합원 또는 작목반
④ 농업기술센터 ⑤ 농업관련 교육 ⑥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4. 귀하께서는 농업과 농촌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4-1 ② 없다 -> 문 5

4-1. 정책 지원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4-2. 그렇다면, 귀하께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은 사업 분야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되는 사업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농축산 식품 가공 ② 식품외 농산물 가공 ③ 농축부산물 가공(비료 등)
④ 농축산식품 직판/직매 ⑤ 농가식당 ⑥ 농가 민박
⑦ 체험 농장 ⑧ 관광농원 ⑨기타(적어주세요_____)

4-3. 귀하께서 받은 지원사업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보조금 지원 ② 융자 지원 ③ 시설 지원 ④ 교육

- ⑤ 경영지도 또는 컨설팅 ⑥ 판로 개척(수출 포함) ⑦ 외국인연수생 등 인력지원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4.4. 그럼, 현재 정책지원을 받은 사업의 경영상태는 그 이전보다 나아지셨습니까?

- ① 매우 어려움 ② 어려움 ③ 보통 ④ 양호함 ⑤ 매우 양호함

5. 귀하는 앞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하면서 농업과 관련한 제조·가공, 유통, 농촌체험관광과 같은 6차산업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반반이다 ④ 있는 편이다 ⑤ 매우 있다

6. 농업과 관련한 6차산업화 추진 방법 중 어떤 형태가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가 독자적으로 추진 ② 기존 민간기업(식품기업, 여행사 등)에 납품
 ③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 ④ 로컬푸드를 통한 판매, 가공, 체험 프로그램 참여
 ⑤ 기타

7. 귀하가 6차산업화를 추진한다고 할 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차별화된 제품생산의 어려움 ② 판매망 확보 어려움 ③ 광고·홍보 수단부족
 ④ 시설·장비 구매 비용 부담 ⑤ 사업체 경영지식 부족(회계, 세무 등)
 ⑥ 전담인력 확보의 어려움 ⑦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의 시장·기술정보 부족
 ⑧ 기타

♣ 다음은 귀하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다. 귀하가 농축산업에 종사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라. 선생님 댁의 연간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의 월급·상여금·은행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세요.

- | | | |
|-----------------|-----------------|-----------------|
| ① 1000만원 미만 | ② 1000만원~1999만원 | ③ 2000만원~2999만원 |
| ④ 3000만원~3999만원 | ⑤ 4000만원~4999만원 | ⑥ 5000만원~5999만원 |
| ⑦ 6000만원~7999만원 | ⑧ 8000만원~9999만원 | ⑨ 1억 원 이상 |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 김광선, 권인혜, 김창호. 2010. 『농촌지역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 2014.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산업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기태, 김원경, 박주희. 2012. 『농협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윤. 2013. “혁신클러스터와 6차산업을 통한 전북농업발전방안.” 『농정연구센터 논집』 47: 95-1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김성우, 김윤진, 차원규. 2014. 『고랭지배추 6차산업화 지구조성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우, 전창곤, 김윤진, 변승연. 2014.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추진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훈, 박동진, 김지현, 이도경, 명수환. 2014. 『6차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 (사)한국농업경제학회,
- 김용렬, 정은미, 민자혜. 2012.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정은미, 최용욱, 한태녕. 2014. 『농촌산업 통계·동향 분석을 통한 6차산업 발전전략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허주녕, 이은경. 2011. 『일본 농산어촌 6차산업화 제도 안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2014. “6차산업, 생산·가공·서비스 융복합 의미.” 『현대양돈』. 307: 32-35.
- 김정섭 등. 2012. “농어촌 지역의 인구·산업·일자리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철민. 200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식품산업의 성장과 구조 변화 요인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2013.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허주녕. 2011. 『농업의 6차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2014. 『일본의 6차산업화 추진과 특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 2005.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09.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09.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3.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업·농촌에 창조를 담다-2014 6차산업화성과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연구소, 2014, 통계로 본 농가경제지표 변화(제332호). 농협경제연구소.
- 류필선. 2014. “ICT 융·복합을 통해 6차 산업으로 이끈다.” 『현대양계』540: pp.140-143.
- 박시현, 김용렬, 권인혜, 류경선. 2012.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 2013.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종훈, 황재희, 이성우. 2014. “농업의 6차산업화가 농가 및 농업법인의 농업 및 농외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0(4): pp.193-208.
- 박준기, 이명기, 박기환, 성주인, 마상진, 김태곤, 정호연. 2014.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변필성, 윤영모. 2011.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연구』. 국토연구원.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14.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보고서.
- 서윤정. 2011.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활성화 사례 및 과제.” 지역생활문화와 농촌관광 심포지엄 발표자료.
- 서윤정. 2013. 『6차 산업 융복합 혁명: 융복합 산업의 원리와 실제』. HNCOM.
- 서윤정, 조록환, 이웅규. 2011. “전통·향토음식을 활용한 푸드투어리즘 개발.” 『농촌관광연구』. 18(1): 117-188. 한국농촌관광학회.
- 성주인, 정규형, 정문수. 20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농어촌산업 고도화/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노승철. 2014. 『지역 일자리 지수 개발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양정임, 이정희, 황대용. 2014. “지역농업자원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 전문가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0(3): 111-120.
- 양현봉. 2015. 『6차산업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유정규. 2013.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역과 발전』. 11: 12-16.
- 이용선, 국승용, 김성우, 서대석, 김종진, 신유선, 노호영, 노수정. 2012.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원예·특작산업 발전전략(1/2년차) : 원예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한성, 이상학, 윤승원. 2012.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사업의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장덕기. 2013. 『전남 로컬푸드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 장양례, 황대용, 김승희, 문명희, 이수진, 장동진, 강희준. 2014. “6차산업 현장활용을 위한 외식중심형 농가레스토랑 만족도제고 연구.” 『관광경영연구』61: 287-307.
- 조록환, 방도혁, 서환석. 2013. “농업·농촌 6차 산업 정책요구 분석.” 『농어촌관광연구』 20(2): 137-152.
- 진혜련, 채혜성. 2013. “농업·농촌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마을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4(5): 597-609.
- 채필호. 2013. “일본의 소위 「6차산업화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외국법제정보』 2013-4: 32-43.
- 최경환, 김용렬, 허주녕, 한태녕. 2014. 『농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 김병률, 김성우, 이동소, 김윤진, 차원규, 박재홍, 강혜정, 안동환. 2013.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5/5차연도) : 식품산업 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해용, 윤유식, 박재덕. 2014. “6차 산업으로서 농촌체험관광의 선택속성과 체험 프로그램 선호도가 농촌관광 행동의도 및 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8(2): 185-198.
- 함유근, 김영수. 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은행,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 네이버, 네이버트렌드분석 (<http://datalab.naver.com/>)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